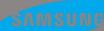


# EU Brief

| EU 동향 |

- 남유럽 재정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노력 전개  
EU strengthens efforts to rescue southern European countries from financial crisis.
- 스페인 경제불안의 구조적 요인과 향후 전망  
Structural reasons behind economic instability in Spain and economic outlook
-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그리스 재정위기  
Political economy of the Greek sovereign debt crisis
- EU의 기술표준과 통상문제  
EU Technical standards and related trade issues
- EU 방위산업 현황 및 과제  
European defence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base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b>EU Focus</b> 남유럽 재정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노력 전개 ..... 002 EU strengthens efforts to rescue southern European countries from financial crisis.	002
	<b>EU Economy</b> 스페인 경제불안의 구조적 요인과 향후 전망 ..... 004 Structural reasons behind economic instability in Spain and economic outlook	004
	<b>EU Politics</b>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그리스 재정위기 ..... 010 Political economy of the Greek sovereign debt crisis	010
	<b>Trade Issues</b> EU의 기술표준과 통상문제 ..... 015 EU Technical standards and related trade issues	015
	<b>Industry Trends</b> EU 방위산업 현황 및 과제 ..... 019 European defence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base	019
	<b>EU Law</b> 그리스 재정위기를 통해 본 EU 경제금융위원회의 역할 ..... 024 The role of Economic and Financial Committee(EFC) in reforming EU's financial market	024
	<b>Social Issues</b> 남유럽 재정위기와 유럽식 복지국가의 영향과 교훈 ..... 028 Lessons of the European social welfare system and effects of financial crisis	028
	<b>Report Review</b> 유로 회원국 간 경쟁력 차이는 거시경제 불균형을 야기 ..... 032 Competitiveness divergences between euro area members lead to intra-euro-zone macroeconomic imbalances	032
	<b>EU Centre news</b> 제12~14회 EU 특별강연 ..... 034 The 12 <sup>th</sup> , 13 <sup>th</sup> and the 14 <sup>th</sup> EU Special Lecture FKCCI: Luncheon Meeting "EU and Korea: Where do we stand?" ..... 035 FKCCI: Luncheon Meeting "EU and Korea: Where do we stand?" 제7회 EU Core Circle Seminar ..... 036 The 7 <sup>th</sup> EU Core Circle Seminar	034 035 036

EU Brief는 EU 집행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Yonsei-SERI EU Centre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입니다.  
 The EU Brief is a newsletter published by the Yonsei-SERI EU Centre and fund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편집 위원: 이종규, 양오석 | 감수 위원: 김득갑 | 편집 담당: 이지혜 | EU Brief에 게재된 내용에 관한 문의나 개선사항은 편집 담당(02-3780-83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남유럽 재정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노력 전개

EU strengthens efforts to rescue southern European countries from financial crisis.

EU와 유로존은 유로화 출범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재정위기가 그리스에서 시작하여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 재정이 취약한 남유럽 국가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재정위기가 유로화 붕괴론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초 남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자 EU는 IMF와 더불어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그리스의 회는 총 300억 유로 규모의 재정긴축 프로그램 관련 법안을 확정하였으며, 주요 유로존 회원국들은 ECB 지분율에 따라 구제금융 분담액 집행을 위해 의회 승인 등 국내 조치를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위기극복 가능성에 대한 불신과 여타 유로존 국가로의 재정위기 이전 가능성 등으로 인해 유럽은 물론 미국, 아시아 등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특히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의 국채금리 및 CDS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상승<sup>1</sup>하였다. 유럽 증시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과 아시아의 증시도 크게 하락하였다. 또한 유로화의 가치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달러당 1.1923유로(6월 7일)까지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유로존 정상들은 당초 계획대로 그리스 구제금융안을 확정하고 유럽의 경제 및 금융상황 전반에 대해 논의한 후 비상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EU 집행위원회, ECB 등 관계기관과 모든 유로존 회원국들은 유로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천명하였다. 각국의 정

상들은 유로존 회원국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며 각 회원국에 대해 「안정성장협약」을 준수<sup>2</sup>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유럽안정메커니즘(European Stabilization Mechanism)을 통해 유로존 내 회원국에 대한 감시와 규율을 강화하고 유로존의 정책조정능력을 제고하며 회원국의 예산 책임 원칙을 확립하여 강력한 위기관리의 틀을 구축할 것을 다짐하였다.

전문가들은 유로존 내 경쟁력이 상이한 국가들에게 단일 환율과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역내 불균형이 확대됨으로써 위기가 증폭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과 무관치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위기 이전부터 유로존 내 북유럽과 남유럽 간에는 산업구조 및 경쟁력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해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경상 및 재정 수지 불균형이 크게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취약국가의 리스크가 부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적극적인 구제금융으로 그리스 재정위기 우려가 소강 국면을 보일 수 있겠으나 구조적 문제 해결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시장의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로존 존속의 경제적 이익이 클 뿐만 아니라 부실 국가들의 퇴출도 제도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유로화 붕괴론까지 몰고 온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은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EU 차원의 재정통합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에 열릴 G20 정상회의, 재무장관이사회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The European Union is facing the biggest crisis since its establishment. Sovereign debt problems, which followe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eem to be spreading in southern Europe. There are some signs of contagion to countries with large budget deficits such as Portugal and Spain, but the worst hit is Greece. On May 10th, EU finance ministers and the IMF agreed on an unprecedented rescue package. In order to show its determination to access the fund, the Greek government has announced a plan to slash its spending by around 30 billion euros and it has come up with various deficit cutting programmes. Euro zone member countries have agreed to share the burden of loan guarantees in proportion to their shares in the European Central Bank and their parliaments have approved their contributions.

However, the European rescue package has not successfully calmed the market. Despite many Euro zone countries' having announced their adjustment plans, investors started to fear an imminent default by Greece and markets froze up as a result. The premiums on 5-year Credit Default Swaps(CDS) of Portugal, Greece, and Spain have continued to rise. European stock markets have been fluctuating with some significant impact on other markets around the world. The euro fell to a new four-year record low against the dollar on June 7th, down to 1.1923 euros per dollar.

The EU Commission and the ECB have announced that they will use all the available policy tools to help countries in trouble. Finance

ministers have agreed that their governments will start tightening their belts to assure the market that there will be no defaults. They have also agreed that there should be more cooperation and more preventive measures to have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working

On top of this, the Council has adopted a European Stabilisation Mechanism to preserve financial stability in Europe and the Commission will closely monitor the respect of the policy conditions by the beneficiary member state, in liaison with the ECB.

Competitiveness divergences between euro zone countries widened the imbalance in the region. There exists structural problems in the euro zone and they cannot be solved by the rescue package. There is a significant gap between northern and southern Europe in their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level of competitiveness. This resulted in an explosion of trade and financial deficits in certain member countries. There is little that economic policy can do to solve the structural problem in the short term and therefore the market will continue to have doubts on the health of less competitive member states' economies. The cost of leaving the monetary union is unimaginable and the breakdown of euro zone is not likely due to various economic and political reasons. There will be talks to push the euro zone closer toward a fiscal union and we expect to hear significant progress at the G20 meeting in June and also at future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ECOFIN) meetings. ★

<sup>1</sup> 10년 만기 국채금리 상승률(5/7/4.30): (그리스) 40.9% (포르투갈) 31.5% (스페인) 13.6%, CDS(5yr)프리미엄 상승률(5/7/4.30): (그리스) 30.6% (포르투갈) 51.7% (스페인) 50.3%

<sup>2</sup> EU 회원국은 1997년 체결된 「안정성장협약」에 의거해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를 각각 명목 GDP 대비 3% 및 60% 이하로 유지해야 함

# 스페인 경제불안의 구조적 요인과 향후 전망

## Structural reasons behind economic instability in Spain and economic outlook

PIGS is an acronym that refers to the economies of southern European countries, namely Portugal, Italy, Greece and Spain, which are suffering from the sovereign debt crisis. Economic instability in southern Europe may be spreading to other major euro-zone member states, including Germany and France, and it is also having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eastern European countries, which are not members of the euro-zone. There are worries about the state of the Spanish economy, but Spain is not Greece. A sovereign default by the Spanish government is not likely as the public sector's external debt is not huge. However, the level of household debt in Spain is very high, and efforts to reduce the private indebtedness is expected to slow the economic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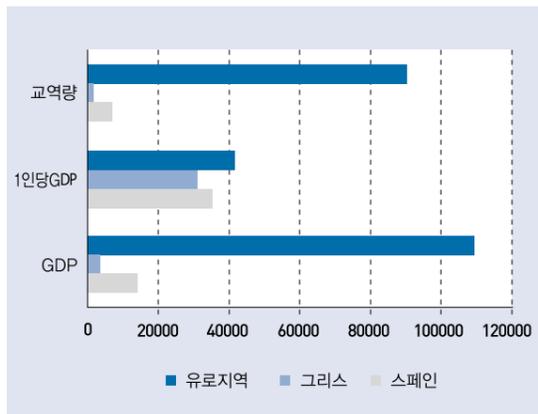
### 스페인 경제불안으로 신용평가 하락

유럽 남서쪽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스페인은 개성 있는 문화를 자랑하는 태양의 나라이다. 투우와 플라멩코로 유명한 스페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온 유럽 경제의 무적함대이다. 그러던 스페인이 최근 그리스와 더불어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를 지칭하는 PIGS 국가로 지목되면서 유럽 전체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주목받고 있다.

2009년 1월 19일 S&P는 스페인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편입시켜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어 2010년 5월 28일에는 Fitch도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하였다. 1994~2007년 기간 동안 연평균 3.5%의 성장세를 기록했던 세계 9위의 경제대국(2008년 현재) 스페인 무적함대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순간이었다.

문제는 스페인의 경우 경제 규모가 그리스의 4배에 달하는 만큼 스페인이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면 유럽 및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그리스와는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2008년 기준 스페인은 인구 4,600만 명, 교역량 6,947억 유로, 1인당 GDP 3만 4,971달러, GDP 1만 3,954 달러(PPP 기준)인 대국이다. 유로지역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도 그리스(3.1%, 2008년)의 4배인 12.8%(2008년)에 달한다.

### ★ 스페인 경제 규모 비교



자료: OECD; IMF; Eurostat

### 신용평가 하락으로 금융불안 가중

스페인 국채 CDS 프리미엄은 5월 12일 143bp를 저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뒤 6월 4일 현재 268bp까지 치솟았다. 2009년 11월부터 아일랜드를 상회하며 최근까지 급상승을 지속하였던 그리스 국채 CDS 프리미엄은 2010년 1월 14일 337bp로 추가 상승(아일랜드 159bp)하였고, 2월 2일 현재 387.47bp를 기록하였다. 이후 그리스 국채 CDS 프리미엄(5년 만기물)은 지속 상승하다가 EU와 IMF의 지원으로 시장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5월 7일 940bp를 정점으로 꺾어졌다. 그러나 그리스 국채 CDS 프리미엄은 5

월 12일 497bp를 저점으로 다시 반등을 지속하며 6월 4일 현재 761bp를 기록하였다. 한편 스페인의 국채 CDS 프리미엄은 그리스를 하회한 채 동일한 동선을 그리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 ★ 스페인 국채(5년물) CDS 프리미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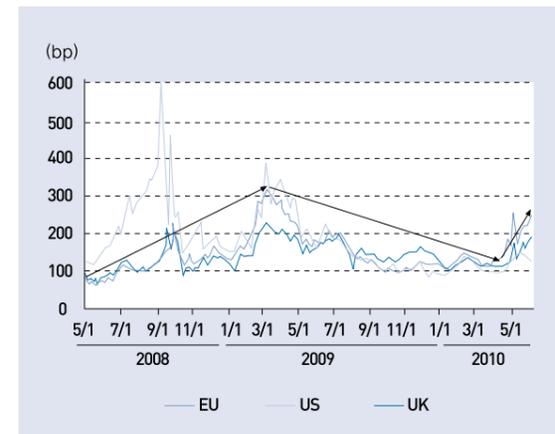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스페인을 비롯한 남유럽의 재정 및 경제 불안은 유럽 은행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데이터스트림(Datastream)이 제공하는 유럽 전체 은행부문 CDS 프리미엄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3월에 최고점을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9년 11월부터 다시 재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6월 4일 현재 EU의 은행부문 CDS 지수는 미국(142bp)과 영국(181bp)을 상회하는 243bp를 기록하였다.

한편 현재 스페인 은행부문 신용등급은 2010년 3월 16일 S&P가 Group 2에서 Group 3으로 하향 조정했으나 전체 Group 10 범주에서 본다면 스페인 은행부문에 대한 신용등급은 아직 양호한 편이다. 스페인의 상업은행들도 비교적 건실한 것으로 평가될 만큼 상황이 나쁘지 않다. 그 증거로 이번 글로벌 금

### ★ 은행부문 CDS 지수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융위기에 구제금융의 수혜를 받은 상업은행은 CCM(Caja Castilla La Mancha) 하나뿐이다.

오히려 스페인의 금융시스템 불안을 야기한 것은 저축은행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저축은행이란 일반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개인 및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공급을 책임지는 은행을 말한다. 스페인에서는 이러한 저축은행들이 2004년 이후 영업지역 제한 완화와 주택경기 호황 등에 힘입어 급성장하였다. 현재 스페인에서는 저축은행의 부실대출이 급증하면서 스페인 국가부도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스페인 저축은행의 위기 사태는 모기지 대출 비중이 높다는 데서 비롯된다. 문제는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의 확산이 스페인 주택 및 건설 시장을 강타하면서 시작되었다. 스페인 저축은행이 급성장하게 된 주요 동력에는 높은 모기지 대출이 자리 잡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투자 관련 부실대출 비율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일반은행에 비해 규제가 심하지 않은 스페인 저축은행은 지금까지 대출 비중을 지나치게 확대해왔다.

2009년 9월 현재 스페인 금융기관 전체의 민간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1만 8,460억 유로이며, 이 가운데 모기지 대출이 6,094억 유로로 33%를 차지하였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일반은행이 차지하는 민간대출 규모가 8,022억 유로로 43.5%를 차지하였고, 저축은행이 8,838억 유로로 47.9%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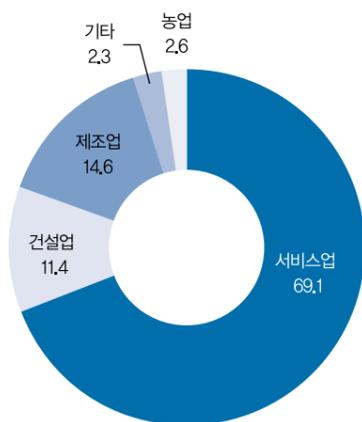
###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와 민간부문 외채 비중 확대

스페인 경제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대외차입 비중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스페인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겪게 된 원인은 대외경쟁력 약화에 따른 제조업 기반의 취약성에서 시작된다. 스페인은 대대로 건설이나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며, 해외직접투자도 오히려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다.

비즈니스는 각각 11.4%와 69.1%를 차지해 스페인 경제는 생산 중심 경제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수출을 통한 외화수입이 적은 편인 데다가 핵심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경우 자재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스페인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5년 -9.0%(GDP 대비)였던 것이 2008년 -13.0%로 증가하였다(Eurostat 자료). 이렇게 증가하는 경상수지 적자는 스페인의 경우 민간부문의 대외차입으로 보전되는 몫이 커서 공공부문의 외채 비중이 더 큰 그리스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스페인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55.2%(2009년)로서 그리스(112.6%)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공부문의 외채 비중(18.3%, 2009.9월 현재) 역시 그리스(65.3%, 2009.6월 현재)를 훨씬 하회한다.

### ★ 스페인 산업별 경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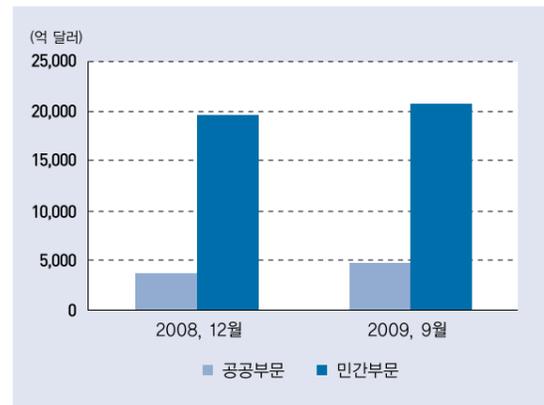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자료: 스페인 통계청: Eurostat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14.6%, 2008년)은 유로지역 평균(17.4%, 2008년)을 하회한다. 23.1%를 차지하는 독일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와 달리 건설 및 서

### ★ 스페인 외채 현황



자료: World Bank

### 재정적자 수준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

남유럽 사태는 주로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한 재정 위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스페인의 경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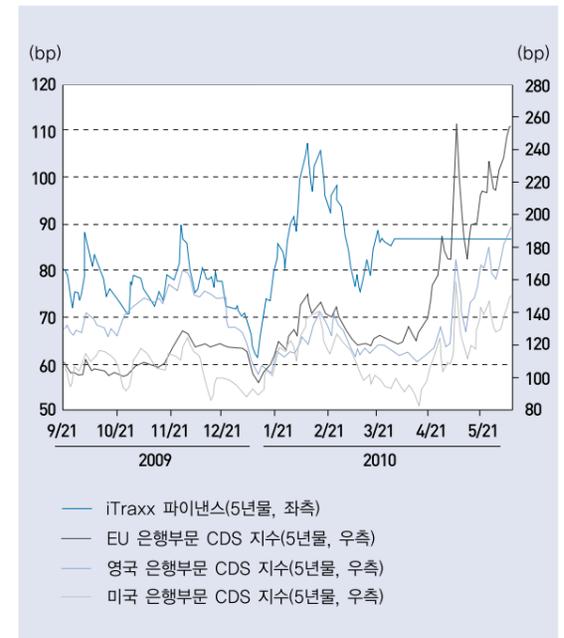
2005~2007년 기간 동안 비록 소폭이기는 하지만 재정적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정부부문의 디폴트 가능성보다는 민간부문의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큰 편이다. 그만큼 재정관리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다. 물론 그렇다 해도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또한 검토 대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스페인 경제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건전성 부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만 한다.

현재 스페인 경제는 여타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사회보장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스페인 경제는 생산성이 낮고 수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및 실업률 증가 등이 악재로 작용하여 당분간 재정적자 폭을 축소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그리스, 영국, 아일랜드, 헝가리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건실한 편이다. 그리스의 경우 2009년 1월 현재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1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유럽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스페인 경제불안이 유럽 및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력은 그리스와 달리 경제규모 면에서 상당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스페인을 포함한 PIGS 국가의 악재는 유럽 및 전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 상태로 빠뜨리고 있다. 이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 도이치 방크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의 채권 신용도를 보여주는 Markit iTraxx 금융부문 서유럽 지수가 2009년 12월 4일 75bp였었는데, 2010년 2월 16일 105bp로 정점을 기록한 뒤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3월 중순부터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2010년 6월 4일 현재 86bp를 유지함으로써 EU 은행 CDS 지수나 영국은행 CDS 지수를 하회하고 있지만 미국은행 CDS 지수를 상회해 유럽 은행부문에 대한 신뢰도가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유럽 주요국 신용도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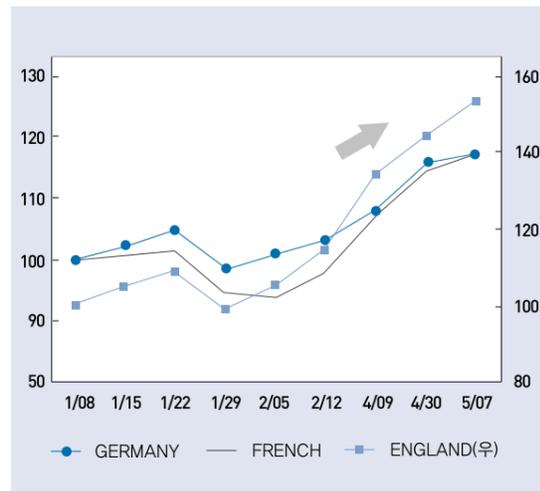
### 유로화 가치와 유로지역 신뢰도 하락

그리스 재정적자 사태를 시작으로 스페인, 포르투갈 등 PIGS 국가들에 대한 경제불안은 글로벌 증시를 하락시키는 동시에 달러-유로 환율도 계속 하락시키고 있다. 2010년 1월 15일 1.44달러, 1월 22일 1.41달러, 1월 29일에는 1.39달러로 하락하면서 주요 지선인 1.4달러가 붕괴되었다. 6월 4일에는 1유로당 1.1967달러로 1.20달러 선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스페인 등 남유럽 사태가 유로지역 신용위험의 증가와 유로화의 급락세를 유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 한 해 동안 달러-유로 환율이 상승함으로써 기축통화로서의 가능성을 거론할 정도였던 유로화가 2010년 들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스페인을 위시한 남유럽 경제불안은 독일, 프랑스 등 유로지역 참여국들의 신용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건실한 비유로지역 국가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한다. 최근 독일, 프랑

스, 영국 등의 국채 CDS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안정세인 듯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CDS 잔액은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

#### ★ CDS 잔액 현황



주: 2010년 1월 8일 수치를 100으로 환산하여 표시  
 자료: ISDA, 이송재 (2010. 5. 18), "CDS로 본 남유럽 위기의 전염 현황" (대신 헤드라인), 대신증권.

CDS 잔액은 디폴트에 대한 실제 신용사건 발생을 염두에 둔 시장참가자들의 반응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CDS 프리미엄보다 더 정확한 시장지표로 인정되고 있다. 이 지표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가 보유한 PIGS 관련 채권 규모가 전체 GDP의 2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PIGS 국가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독일과 프랑스가 위협해진다는 의미이다.

#### 헝가리를 예의주시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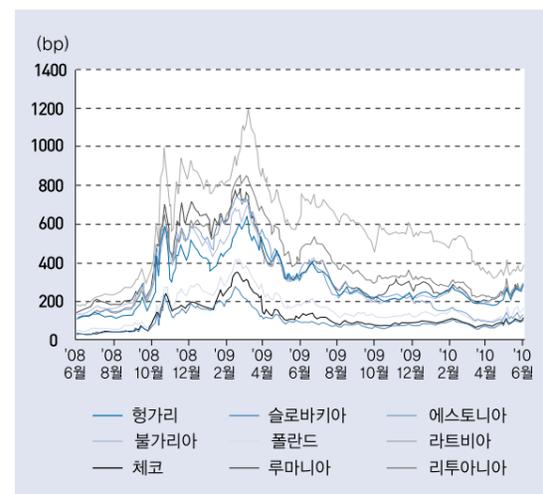
그리스에서 시작한 재정위기 공포가 스페인, 포르투갈을 거쳐 동유럽의 대표국가인 헝가리로 동진하고 있다. 2010년 6월 4일 헝가리 우파 신정부는 경제정책을 검토한 결과 2010년 정부의 재정적자가 과거 정부가 밝힌 국내총생산 대비 4.0% 수준이 아니라

7.5%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그리스 신정부의 재무장관이 ECOFIN 회동에서 재정적자 폭이 전(前) 정부가 밝힌 6%가 아니라 12%에 달한다는 '고해성사'가 헝가리에서도 다시 반복된 셈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2009년 3월 이후 하락하던 동유럽의 헝가리와 라트비아 국채 CDS 프리미엄이 치솟고 있다. 국가부도 가능성 판단에 사용되는 국채(만기 5년물) CDS 프리미엄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1월 1일 54.8bp였던 헝가리의 국채 CDS 프리미엄이 2010년 6월 1일 252bp를 기록했다. 지난달 집권한 중도우파 헝가리 신정부가 재정적자 폭에 대한 '고해성사'를 한 6월 4일에는 410bp로 치솟았다. 이는 발표 전날(6월 3일)의 307bp에 비하면 약 100bp가 상승한 수치이다. 6월 4일 현재 헝가리의 국채 CDS 프리미엄 수준은 2009년 동유럽 위기 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라트비아(6월 4일 402bp)를 상회한다. 이번 헝가리 사태는 6월 둘째 주 중에 헝가리 정부가 발표하게 될 경제정책 실행계획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헝가리 사태와 더불어 남유럽과 동유럽을 아우르는 '디폴트 벨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 동유럽 국채(5년물) CDS 프리미엄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낙후된 동유럽 경제사정을 생각해보면 헝가리뿐만 아니라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재정적자 규모를 은폐하고 있을 것이라는 불신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지나친 비판론과 낙관론을 모두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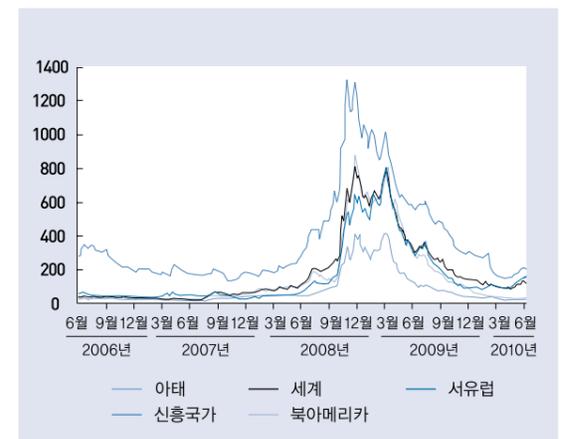
스페인인 국가채무 비율이 여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공공부문에서의 대외채무 규모 역시 크지 않다. 따라서 그리스와 같은 국가 디폴트 상황까지 치달게 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채무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스페인 경제의 붕괴를 국가 수준과 민간 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자는 안심할 수 있지만 후자는 경계해야 한다.

헝가리 위기 역시 그 파장을 염려한 EU가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다. 올리 렌 EU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헝가리 재정위기가 과장된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헝가리는 그리스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 신용평가사 Moody's 역시 헝가리가 그리스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헝가리 상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경제불안과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온 동유럽 위기 사태는 현재 유럽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 증거로 Fitch사가 개발한 세계 지역별 디폴트 지수에 따르면 2006년 6월 2일 59였던 서유럽 디폴트 지수가 2010년 6월 4일 현재 143으로 급상승하였다. 동일 기간 동안 세계 디폴트 지수는 40에서 130으로 상승하였고, 북아메리카는 31에서 34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와 달리 아태지역의 디폴트 지수는 28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신흥국은 282에서 201로 오히려 하락하였다.

2009년 동유럽 경제불안, 2010년 그리스를 비롯한 PIGS 불안, 그리고 헝가리 및 그 외 동유럽으로 다시 돌아온 경제불안 전염 사태 등 일련의 신용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작금에 우리가 명심할 것은 신

#### ★ 글로벌 디폴트 지수 현황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나친 비판론도 그리고 지나친 낙관론도 모두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이다. ★

양오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그리스 재정위기

## Political economy of the Greek sovereign debt crisis

The rise in default probabilities of Greece is reflected in the downgrade of its credit rating and its bond yields have been rising to unprecedented levels. If Greece were to remain a member of the euro-zone and to clean up its reputation that has been tarnished as it has been accused of deliberately misreporting some public debt statistics, it has to adopt strict structural reforms in many different areas. The Greek rescue package had to be approved by member states' parliaments, and it required a significant support from its contributors. The rescue package is unpopular in Germany, its biggest contributor, and it has been difficult to persuade the public even after the approval. Merkel's government needs to take the political leadership as matched with Germany's economic might if the EU is to strengthen its integration process and to achieve stability and growth.

### 그리스 재정위기 현황

최근 그리스는 국가신용등급의 하락, 국채금리의 상승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에서 차입이 어려워져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09년 그리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수준은 각각 13.6%와 115.1%로 유로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S&P는 2010년 4월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인 'BB+' 로 조정했다.

그리스 재정위기는 유로체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스 재정위기가 표면화된 2009년 말 이후 유로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스 장기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동안 유로화의 대비 달러 환율은 2010년 5월 7일 현재 2009년 최고점 (2009년 11월 25일) 대비 15.5% 하락했다.

2010년 5월 EU와 IMF의 공동 구제지원 발표로 그리스 재정위기는 일단 봉합되었으나 구조적 불안 요인은 상존해 있다. 그리스가 재정적자를 「안정성장협약(Stability & Growth Pact)」이 허용하는 GDP의 3% 수준으로 낮추려면 고통스러운 디플레이션 정책이 불가피하다. 그리스 경제가 2010~2012년 평균 -1.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그리스 정부는 2014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뉴욕대의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교수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그리스 등 남부 유로존 국가들이 통화가치를 평가절하

하기 위해 수년 내에 유로화를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스가 '유럽의 탕자' 로 지목받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눈여겨보아야 할 국가가 바로 독일이다. 독일은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성립 이후 지금까지 유럽 통합의 주축국이였다. 특히 독일은 유럽을 단일경제권으로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는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은 분담금을 기꺼이 지불해왔다. 그러나 이번 그리스 재정위기에서 독일은 EU 차원의 구제지원에 소극적으로 일관하여 그리스 위기를 유로존 전체의 위기로 확산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불어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sup>1</sup>를 줄이기 위해 재정긴축을 서두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독일의 선제적 재정긴축을 유로존 전체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근궁핍화(Beggar-thy-neighbor)' 정책으로 보고 있다.<sup>2</sup> 그 이유는 독일의 재정긴축은 유로존 최대의 수출국인 독일과 다른 유로존 국가들 간의 무역불균형을 심화시켜 그리스 등 재정난과 경

<sup>1</sup> 2009년 독일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각각 GDP의 3.3%와 73.2%로 「안정성장협약」에서 정한 수준을 초과했다.

<sup>2</sup> Bibow, J. (2010. 4. 21.). Germany Is Unfit for the Euro. *Eurointelligence*; Germany vs. Europe. (2010. 5. 26.). *New York Times*.

기침체를 동시에 겪고 있는 국가들을 기나긴 불황의 늪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재정위기가 해결되고 유로화가 안정을 되찾으려면 그리스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그리스처럼 디폴트 위기에 몰린 유로존 국가들을 위한 독일의 리더십 역할이 모두 필요하다. 그런데 이 두 조건이 과연 충족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그리스 정부는 불황기에 재정긴축을 포함한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역량이 있는가? 유로존은 독일이 유로존의 경제회복을 위해 지도력을 발휘해줄기를 바라고 있지만, 독일은 이미 親유럽 노선을 버리고 자국 중심주의로 돌아선 것은 아닌가? 이것이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질문들이다.

### 그리스 재정위기의 역사·구조적 성격

그리스는 이미 1980년대 초부터 방만한 재정운영을 지속해왔다. 그리스는 GDP 대비 국가부채가 1980년 22.3%에서 2000년 103.4%로 증가하여 유로화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데 실패했으나 정부가 재정통계를 조작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규모를 속임으로써 2001년 유로화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는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최근 들어 재정적자가

#### ★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국가부채 추이



주: GDP 대비 수치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0). Statistical Annex of European Economy.

급증한 아일랜드와는 차이가 있다. 아일랜드도 한때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가 100%를 넘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성공적으로 국가부채를 조정해 재정안정화를 달성했다.

1980년대 초 이후 그리스 재정이 악화된 원인은 그리스의 포퓰리즘 정치가 시장경제를 왜곡시켰기 때문이다. 1975년 민주화 이후 그리스에서는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정치인과 유권자 간 유착관계로 민주주의가 변질되었다. 1981년에 집권한 사회당(PASOK)은 중산층 근로자와 저소득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공적 연금지출을 확대하고<sup>3</sup>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을 허용했다.

특히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표를 얻는 대가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고용이 보장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해주었다. 그리스의 초중등 교육기관은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스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에서 교육의 질이 가장 우수한 핀란드보다도 적은데, 2007년 그리스의 초중등교육과 중등교육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0.1명과 7.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소 수준이다. 이는 그리스 정부가 초·중등교사를 불필요하게 많이 임용했기 때문이다.

유로화 가입 이후에도 포퓰리즘 정치는 계속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그리스 좌우파 정당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연금개혁, 노동유연화 등의 구조개혁은 지연되었다. 2000~2007년 기간 중 그리스가 주력산업인 관광, 해운, 선박업 등의 호황으로 연평균 4.2%의 고성장을 기록해 정부는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다.

<sup>3</sup> 그리스 공적연금의 방만한 운영은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그리스 정부는 공기업 및 민간기업과 결탁하여 기여금 탈루행위를 용인해주었다. 둘째, 가입경력이 거의 없는 농민, 자영업자 등에게도 20년 이상 기여금을 낸 사람들과 똑같이 수급권을 인정해주었다. 셋째,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했다. 현재 그리스 공적연금 급여는 가족 중 단독 가입자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95.7%를 보장하여 OECD 최고 수준이다. (Petmesidou, M. (2006). Tracking Social Protection. In Petmesidou, M. & Mossialos, E. (Eds.), *Social Policy Developments in Greece* (p. 40): Ashgate Publishing.; SourceOECD, Statistics.)

### 개혁 추진에 불리한 대내외적 여건은 상존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 있으려면 이전 정부의 통계 조작으로 실추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재 그리스 정부는 대외불균형 조정에 필요한 환율정책 수단을 상실한 가운데 불황기에 재정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하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00~2008년 그리스의 연평균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12.3%로 1990~1999년 평균 1.8%에 비해 급증했는데, 이러한 대외불균형 문제는 긴축에 따른 그리스 경제의 디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켰다.

재정위기를 유발한 그리스 국내 정치구조의 문제가 상존한 가운데 위로부터 추진하는 재정개혁은 선거에 의존하는 민주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성장 없이 안정만을 추구할 경우 성장이 뒷받침될 때보다 더 많은 사회통합이 확보되어야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는 2009년 말 재정위기 발생 이후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에 실패했다. 2010년 2월부터 5월 사이 정부의 재정개혁안이 발표될 때마다 이에 항의하는 대중시위가 발생했다. 5월 5일에는 시위대의 화염병 투척으로 아테네 시내 은행에 화재가 발생하여 직원 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현재 그리스 국민의 35%만이 IMF의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4</sup> 이를 의식해 사회당 정부도 한편으로는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IMF에 대한 국민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부채질하는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필요하지만 그럴 경우 과거 포퓰리즘 정치의 수혜자였던 집단들이 일제히 개혁에 저항해 정부 내 개혁 주도 세력이 소수로 전락하고 재집권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현재 그리스 정부가 안고 있는 최대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의 개혁 추진 역량을 감안해 EU 차

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까닭이 있다.

그리스 구조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U 차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데, 그리스에 숨통을 열어줌으로써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반감을 희석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완화를 추진하거나 2014년으로 정한 재정 정상화 목표 연도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모두 독일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 국내 정치적 제약으로 左顧右盼하는 메르켈 정부

독일은 그리스 재정위기 발생 6개월 후인 2010년 5월 초에야 비로소 EU 차원의 지원에 합의했다. 메르켈 정부가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을 그리스의 대내적 불균형, 즉 과잉지출에 있다고 보고 그리스의 강도 높은 재정긴축을 구제지원의 선행조건으로 내세우는 바람에 EU 차원의 공동대응이 차질을 빚은 것이다. 또한 독일은 최근 2011~2016년 사이 매년 100억 유로의 재정지출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지출한 재정을 거둬들이는 재정 출구전략을 조기에 실행할 경우 독일과 다른 유로존 국가들 간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아직 불황에서 회복 중인 유로존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독일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동서독 통일 이후 독일의 對EU 정책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는 해석이 있다.<sup>5</sup> 즉, 독일이 분단국가 시절에는 국제관계에서 힘이 약했지만 통일 이후에는 경제력에 걸맞게 자신의 국가이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독일이 최근 유로체제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왜 유로화를 고수하고 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최근 나타난 독일의 비협조적 태도는 독일정부가 2008년 글로벌 위

기 이전부터 존재해온 국내 정치적 제약을 의식해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응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대내적 불균형을 혐오하는 독일 국민

현재 메르켈 정부가 직면한 최대의 국내 정치적 제약은 과잉지출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등 대내적 불균형을 혐오하는 국민 여론이다. 2010년 3월 여론조사에서 독일 국민의 61%가 그리스 지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독일은 2000~2008년 사이 단위노동비용이 -0.2% 감소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고 연간 GDP의 4%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유로화 가입 이후 임금상승 억제와 'Hartz IV'로 대표되는 사회복지 개혁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에 성공한 독일 국민은 독일과 정반대의 길을 걷다 재정위기를 맞은 그리스에 대한 구제지원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남유럽 국가에 대한 회의적인 국내 여론은 사실 유로화 출범 당시부터 이미 드러난 바 있다. 1990년대 단일통화권 창설에 적극적이었던 헬무트 콜 정부와 달리 당시 독일 국내 여론은 유로화 도입에 비판적이었다. 1997년 11월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 국민의 54%가 유럽단일통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달리 방만한 재정 운영과 고질적 인플레이션을 겪어온 남유럽 국가가 참여한 유럽단일통화권이 통화가치 불안과 재정건전성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독일정부는 다음의 삼중 안전장치를 제시하며 유로화는 무늬만 다른 마르크화가 될 것이라고 국내 반대여론을 무마했다. 첫째, 인플레이션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유럽중앙은행을 만들었다. 둘째, 「안정성장협약」을 도입해 회원국의 재정지출을 억제하고자 했다. 셋째, EU 조약에 구제지원 금지조항을 삽입해 다른 회원국이 재정난을 겪더라도

독일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리스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독일 국민이 위 세 가지 안전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음을 깨닫자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유로화에 대한 회의론이 되살아났다.<sup>7</sup> 경기부양과 금융구제를 위해 유럽 각국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했던 「안정성장협약」은 유명무실해졌다. 또한 2010년 5월 2일 유로존이 1,100억 규모의 그리스 구제지원을 결정하면서 리스본 조약의 구제지원금지조항도 무색해졌다. 유럽중앙은행도 유로존의 그리스 구제지원 발표 이후부터 5월 17일까지 총 165억 유로 규모의 유로존 국채를 매입했는데, 이는 독일인들에게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이 재정난 해결을 위해 정치적 독립이 허약한 중앙은행에 국채를 인수하게 한 결과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악몽과 같은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 독일정부의 정책추진력 약화

메르켈 정부는 그리스 구제지원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州) 선거(5월 9일)를 의식해 그리스에 대한 조기 지원에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결국 그리스 구제지원 발표 이후에 치뤄진 NRW 주 선거에서 독일 기민당-자민당 연립정권이 패배함으로써 독일 연방 상원에서 다수 의석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제 사민당, 녹색당 등 야당의 지지가 없으면 메르켈 정부는 주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정치적 난관에 봉착했다.

또한 메르켈 정부의 지지율 하락도 정책 추진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2010년 5월 28일 조사에서 메르켈의 지지율은 그녀가 총리가 된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인 48%까지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현 기

<sup>4</sup> Papandreu Braced for Fresh Fury. (2010. 5. 1.). *Financial Times*.

<sup>5</sup> Those Damned Sceptical Germans. (2010. 5. 29.). *The Economist*, 395(8684), 55.

<sup>6</sup> Germans Oppose Greek Aid, Poll Shows. (2010. 3. 21.). *Financial Times*.

<sup>7</sup> 1998년 독일의 유로화 가입에 반대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한 독일 학자 3인이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독일의 리스본조약 가입과 그리스에 대한 구제지원에 항의해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화된 유로화에 대한 독일 여론의 추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EU의 기술표준과 통상문제

## EU Technical standards and related trade issues

The Korea-EU FTA represents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Korean firms to expand their businesses in Europe. In order to realise this opportunity, Korean companies must overcome the barriers which are related to technical standards and regulations of the EU. When the FTA enters into force, tariffs on most products will be reduced significantly yet the technical standards will remain as the major non-tariff barrier. Korean firms have not been putting in efforts to satisfy these standards as the tariff had been too high in certain areas. Making products to satisfy EU's essential requirements has an additional benefit as many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and Southeast Asia, and also ACP member states have adopted identical technical and safety standards.

### 기술표준 관련 국제규범 발전

국제무역의 기술 규정과 기준에 관한 문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GATT 협정')」 체제하에서는 별도의 협정이나 조항에서 직접적으로 규정된 바 없이 여타의 비관세장벽 규제와 함께 「GATT 협정」의 제3조, 제11조, 그리고 제20조에 간략하게 명시된 의무사항과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즉, 기술 규정에 관한 문제는 「GATT 협정」 제3조의 '내국민대우원칙', 제11조의 '수량제한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그리고 예외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20(b)조의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제20(d)조의 '기만적 관행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따라 비관세장벽의 한 형태로 규제되었다.

국제무역에서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치된 GATT 작업반은 기술표준을 각 회원국의 수출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으로 결론지었다. 그리고 1979년 도쿄라운드 타결 당시 32개국의 GATT 체결국들은 복수 간(plurilateral) 무역협정의 형태로 「무역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도쿄라운드 「TBT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도쿄라운드 「TBT 협정」은 복수 간 무역협정의 형태로 체결됨으로써 여타의 「도쿄라운드 부속협정(Side Agreement)」과 마찬가지로 해당 부속협정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GATT 체결국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도쿄라운드 「TBT 협정」은 1980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으며, WTO 체제가 발족하기 직전인 1994년에는 44개국이 채택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TBT 협정」과 관련된 협상은 가장 빨리 최종 합의를 도출해낸 성공적인 협상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 WTO 「TBT 협정」의 주요 규범

WTO의 「TBT 협정」에서 정의하는 무역 기술장벽은 무역 상대국 간에 서로 상이한 표준(Standard),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적합성 평가 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등을 채택·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제반의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특정 국가가 각종 표준, 기술규정 및 인증절차 등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수출국은 수입국의 제반 표준 및 기술규정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소비해야 하므로 효과적인 수입제한장치가 된다. 따라서 WTO 「TBT 협정」은 WTO 회원국들이 합리적으로 표준 관련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을 활성화하는 한편, 동 제도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TBT 협정」에서 강제 이행의무가 있는 기술규정에 관한 주요 규범은 다음과 같다. 우선, WTO 회원국은 기술규정과 관련하여 특정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 자국산 동종 상품 및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보장

민당-자민당 중도우파 연정보다 이전 기민당-사민당 좌우 대연정을 선호하는 비율도 58%에 달했다. 유로존의 안정을 위해서는 그리스 추가 지원, 독일의 재정적자 감수 등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정책을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연방상원에서의 다수 의석 상실과 국민 지지도 하락은 독일의 인근공핍화 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여론을 의식해 左顧右眄하기보다는 국가와 유로존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유럽 통합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치가(statesman)의 면모를 보여야 할 때이다. ★

박 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메르켈 정부

그리스 개혁 추진 역량의 한계와 대외적 악조건을 고려할 때 그리스 재정위기의 해결과 유로존의 안정을 위해 독일의 리더십 역할이 절실하다. 독일은 유럽 통합의 최대 수혜자로서 EU를 통해 동서독 통일, 수출 시장 확대 등을 얻었다. 1989년에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는 유럽경제통화동맹(EMU) 창설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프랑스로부터 독일 통일에 대한 승인을 확보했다.<sup>8</sup> EU는 독일에게 가까운 수출시장이 되었고, 특히 유로체제 출범 후 독일은 연평균 GDP 대비 4.4%라는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했다.

유로존의 안정과 유럽 통합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선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독일의 전략적 국가이익과도 합치된다. 그리스 재정위기가 다른 PIGS 국가들로 전이될 경우 유로존은 와해되고 유럽 통합은 후퇴될 것이다. 독일이 미국, 중국과 더불어 국제 질서의 주축이 되려면 독자적으로는 어렵고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을 건설하는 수밖에 없다. EU 최대의 경제대국인 독일의 GDP는 2008년 현재 미국의 20.2%, 중국의 36.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유로존의 안정은 메르켈 정부가 독일의 전략적 국가이익을 야당과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르켈 정부가 국내

<sup>8</sup> Katzenstein, P. (1997). United Germany in an Integrating Europe. *Current History*, March, 116-123.

할 의무가 있다. 즉, 회원국이 기술규정을 시행할 때 다른 회원국들의 상품을 자국 또는 여타 회원국의 상품과 비교하여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TBT 협정」 제2.1조의 비차별 규정에서 소위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이 함께 규정되고 있다.

둘째, WTO 「TBT 협정」에는 기술규정 선정 시 필요 한 수준보다 무역 제한적이지 않도록(shall not be more trade restrictive than necessary) 할 것과 이를 시행할 때 비차별적(no less favorable treatment)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 규정은 기존의 무역관계에서 각국의 경제적 이해를 저해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므로 새로운 기술규정 도입 시 기존 시장현황과 무역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표준정책 도입 시 한국정부는 관련 시장현황을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 시장질서에 불필요한 변화를 야기하는 조치의 경우 통상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셋째, 「TBT 협정」은 회원국들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할 때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을 제외하고는 국제기준 또는 관련 부분을 자국 기술규정의 토대로 사용할 것을 규정한다. 특히 '기술규정이 필요하고 관련 국제기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their completion is imminent)' 국제기준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의 「TBT 협정」 관련 주무 기관은 현재 시점에서 채택 및 시행되고 있는 국제기준뿐 아니라, 관련 국제기구에서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기술표준 관련 WTO 분쟁과 EU의 현황

도쿄라운드에서 최초로 마련된 「TBT 협정」은 GATT 체제하에서는 체약국의 참여가 많지 않았으나 153개 회원국을 가진 WTO 체제로 통합되면서 최근 활발한 분쟁해결 기준이 되고 있다.

2010년 6월 현재 WTO 회원국들은 총 38차례의 「TBT 협정」 관련 분쟁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했

다. 한국은 WTO가 설립된 직후 「TBT 협정」과 관련하여 세 차례 피소된 바 있으며, 모두 합의를 통해 해결했다. 당시 WTO 체제하의 분쟁해결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TBT 협정」의 법적 의무에 대해서도 경험이 없었던 점이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해 분쟁사안을 해결한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38건의 「TBT 협정」 관련 분쟁사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17건이 EU의 조치로 이루어진 점은 특기할 만하다. 37건의 통상 마찰 중 공식적인 분쟁해결 패널절차<sup>1</sup>로 이어진 사건은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총 10건인데, 모두 EU의 조치에 관한 것이다. 이 중에서 패널이 「TBT 협정」이슈로 판단하여 실제로 심의한 분쟁은 모두 6건이다. 그리고 EC-Sardines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 <표 1> WTO 「TBT 협정」 관련 패널절차가 진행된 분쟁: 1995~2010. 6

분쟁	제소국
EC-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WT/DS293)	아르헨티나
EC-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WT/DS292)	캐나다
EC-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WT/DS291)	미국
EC-Protection of 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WT/DS290)	호주
EC-Trade Description of Sardines (WT/DS231)	페루
EC-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Products Containing Asbestos (WT/DS135)	캐나다
EC-Measures Affecting Butter Products (WT/DS72)	뉴질랜드
EC-Trade Description of Scallops (WT/DS14)	칠레
EC-Trade Description of Scallops (WT/DS12)	페루
EC-Trade Description of Scallops (WT/DS7)	캐나다

자료: WTO

<sup>1</sup>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협의절차, 패널절차, 상소절차, 이행절차로 구분된다. 각 분쟁해결단계마다 WTO의 모든 회원국들로 구성되는 분쟁해결기관(DSB: Dispute Settlement Body)이 주된 감독이행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일반적으로 WTO 분쟁해결제도는 곧 패널절차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로 패널절차의 진행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는 패널심의 과정에서 분쟁당사국들의 비공식적인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었고 패널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이를 보더라도 EU는 기술 규정 또는 표준과 관련하여 WTO에서 가장 분쟁을 빈번하게 야기하고 있으며, WTO 협정상 합치성에 관한 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C 관련 WTO 「TBT 협정」 분쟁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주로 농산물 수입과 관련된 분쟁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이는 예를 들어 일본의 WTO 「TBT 협정」 분쟁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일본의 경우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는 주로 검역조치와 관련된 분쟁사안이 많다. 그러나 EC의 경우 검역조치보다는 주로 식품 명칭이나 라벨링 등에 관해 독특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다수의 분쟁을 촉발하고 있다.

「TBT 협정」과 관련한 최초의 분쟁사안은 EC에 대한 것이며, 유일하게 회람된 패널보고서도 EC의 조치에 관한 것인 점은 주목할 만하다.

### 한-EU FTA 기술표준 규정

한-EU FTA는 별도로 TBT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의 「TBT 협정」 조치 중 대표적으로 통상 문제를 야기하는 마킹 및 라벨링 규제에 대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목적 이외에는 양측 모두 통상장벽이나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원확보(fiscal purpose)를 위한 마킹은 교역 장애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합법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4조 제2항에서는 기술규정 관련 법령 등을 제·개정할 경우 국내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상대 측 이해당사자의 비차별적 참여를 허용하는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측의 이해관계자는 서로의 기술규정 제·개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정보 입수 및 의견 제안이 가능하데, 이는 무역 상대국의 기술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이해당사국의 의견제시(comment) 권리만 포함하고 있는 WTO 「TBT 협정」

보다 투명성 의무가 강화된 것이다. 또한, 제·개정하고자 하는 기술규정안을 WTO에 통보한 후 최소 60일의 서면의견 제출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도 60일 기간을 권고사항으로 규정하는 WTO 「TBT 협정」보다 진일보한 것으로서 양국 간 기술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4.3조 제1항에서는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협의체(regulatory dialogue) 설립을 허가하고 있다. 즉, TBT 관련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규제 기관 간에 규제협의체를 설치하여 수평적(예: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 혹은 분야별(예: 의약품, 화장품 등) 주제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WTO 「TBT 협정」 제2.7조에서는 타국 기술규정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권장하고 있는데 협의체 활용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된다.

또한 제4.4조 제3항에서는 EU 회원국 사이에 기술규정이 상이하게 적용되어 생기는 혼란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EU 회원국 간 통일성 있는 제도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10조에서는 「TBT 협정」의 이행 및 행정 사항 협의, TBT 이슈 해결을 위해 TBT 조정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양측은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상설 채널 성격의 TBT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 대신 TBT 조정자를 지정하고 필요시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도록 합의했다.

주목할 만한 미합의 내용으로는 'Made in EU' 표시를 들 수 있다. 협상 초기부터 EU는 특정 상품이 EU 회원국 내 여러 국가를 거쳐 제조되는 경우에 원산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Made in EU' 표시의 허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소비자에 대한 선택권 제한 및 기만적 행위 유발 우려 등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함에 따라 결국 EU는 'Made in EU' 허용 요구를 철회했다. 사실 EU 역내 회원국 간 산업협력 구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Made in EU' 는 EU 내에서 공식적인 도입이

지연되어 한-EU FTA 차원에서 성사되지 못하였다.

한-EU FTA의 기술표준 관련 쟁점들 중 상당수가 TBT 장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에서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EU는 공급자 적합성 선언방식(SDoC)을 적용하고 한국은 전자파 적합성과 전기안전을 구분하여 협정발효 3년 이내에 인증이 필요 없는 간소화된 적합성 평가절차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기술표준에 민감한 자동차 산업의 경우, WP.29<sup>2</sup>를 자동차 및 부품 관련 국제표준 제정기구로 인정하여 WP.29의 표준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동 작업반에서 제정된 새 규정을 서둘러 채택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화학물질 분야는 최근 EU가 REACH(화학물질 등록·평가·승인제도)<sup>3</sup> 등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국의 특정 화학물질 규제가 양자 간 통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초래할 경우 선의를 가지고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 기술표준 대응방안

한-EU FTA를 계기로 확대될 시장접근성은 EU의 기술표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산업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계가 EU의 기술표준체계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경우 EU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인도, 아세안 등 개발도상국들의 제품과 한국제품을 차별화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하는 데 유용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무역혜택의 가능성은 한국 산업계가 EU의 기술표준체계를 수용하는 유인을 증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국 기술표준체계의 개선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게 된다.

그간 한국 산업계 입장에서 EU 시장은 높은 관세장벽과 더불어 기술표준제도와 같은 비관세장벽에 막혀져 평가되었다. 그러나 EU 시장의 고율관세가 FTA를 통해 철폐되면서 한국 산업계는 무역혜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는 기술표준제도를 해결할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EU 시장에서의 기술표준을 충족하는 경우 EU와 식민지 관계를 유지했던 소위 ACP 국가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동 및

동남아시아 시장들의 기술표준을 자동으로 충족하게 되는 혜택이 있어 한국 산업계의 기술표준 관련 역량 제고의 개연성이 크다.

현재 전례 없는 수준으로 진행되는 한국정부의 FTA 정책은 조만간 한국 시장을 전면적으로 글로벌 경쟁에 노출시키게 된다. 이때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한국 산업과 시장을 개발도상국의 저가 수출로부터 방어하는 수단이 기술표준정책이 된다. 불필요한 기술장벽을 도입하는 차원이 아니라 소비자 안전 및 환경보호 등 정당한 정책목표를 달성해 한국 정책 기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산업환경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술표준정책을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 수출시장에서의 기술표준체계 수용을 국내 산업계와 소비자가 기술표준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술표준의 경우, 과거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정부규제로 치부되어 왔다. 지난 10여 년간 과감한 정부규제 철폐와 개편 차원에서 획기적인 기술표준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체계에 비해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EU FTA를 계기로 한국 산업부문의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기술표준 체계 선진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및 체제를 재정비하여 선진국 수준의 기술표준 제도 및 환경을 확립해야 한다. ★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sup>2</sup> WP.29은 '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을 뜻하는데, 국제연합 유럽경제사회(UN ECE)의 내륙교통위원회(Inland Transport Committee) 산하의 자동차 기술표준의 조화와 개발을 담당하는 작업반으로 1958년 협정을 주관한다.

<sup>3</sup>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약자인데, 2008년 6월부터 시행된 EU의 대표적인 화학물질 관리제도이다. 동 제도에 EU에서 제조하거나 EU에 수입되는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위해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등록·평가·승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규제대상 국내업체들은 지난 2008년 12월 이전에 사전등록을 마무리하여 수출량별로 일정 유예기간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수출상 큰 문제를 겪지는 않았으나, 향후 동 제도의 운용에 따라 한국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 EU 방위산업 현황 및 과제

## European defence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base

Europe's defence industry has been shrinking as its governments' defence expenditure has been declining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S has a total defence budget that is more than double the size of the EU's and the defence R&D spending of the EU is one-sixth of the US level. Moreover, R&D investment in the EU is often fragmented, leading to duplication. EU's arms producing companies are struggling to compete in a fast changing environment. Various external factors such as Russia's recently improved relations with the EU and the US, and EU governments' austerity measures are expected to affect the future of the defence industry. The level of competition will intensify as emerging countries' defence firms are growing rapidly. The EU's defence industry faces two major challenges: one is to bring down its internal trade barriers and protective policies, and the other is to raise the R&D spending and to achieve the synergy by collaborating with other industrial sectors.

### 미국의 방위산업이 EU보다 월등한 상황

냉전이 끝난 후 20여 년간 EU의 국방예산 감축으로 EU 방위산업의 매출 규모와 고용자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sup>1</sup> 2008년 EU의 국방예산은 GDP 대비 1.63%를 기록하였다. 이 중 프랑스가 454억 유로(GDP 대비 2.32%), 영국이 420억 유로(2.32%), 독일이 317억 유로(1.27%), 이탈리아가 226억 유로(1.44%)로 상위 4개국이 EU 총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방예산을 집

행하는 미국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EU에 비해 월등하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선정한 세계 100대 군수업체 중 미국기업은 44개, EU 기업은 32개가 포함되어 있다. 100대 군수업체의 2008년 총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390억 달러 증가한 3,846억 달러였는데, 이 중 60%를 미국기업이 차지하여 31%를 차지한 EU 기업들의 두 배 가까이 되는 매출액을 기록했다. 미국 군수업체들은 상위 20대에 14곳이 포함되어 있고 상위권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여전히 EU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EU 방위산업은 직접적으로 37.7만 명, 직간접적으로는 71.8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sup>2</sup>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상위 5대 무기 수출국에 EU 회원국이 3개 포함되었으며, EU는 세계 무기 수출의 31.6%를 차지했다.<sup>3</sup> 또한 EU 군수업체들은 세계 100대 순위에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32개의 EU 군수업체 중 영국기업이 11개(497억 유로), 프랑스 기업이 7개(232억 유로), 독일기업이

★ 2008년 EU와 미국 국방예산 및 투자 규모 비교

항목	(단위: 유로, %)	
	EU	미국
국방예산	2,000억	4,660억
-GDP 대비 비중	1.63	4.7
-국민1인당	406	1,532
-군인1인당	111,198	332,699
투자(R&D 포함)	419억	1,662억
-총예산 대비 비중	20.9	35.7
-군인1인당	23,274	127,296
R&D	86억	541억
-총예산 대비 비중	4.3	10

자료: European Defense Agency (2009, 12), European-United States Defence Expenditure in 2008; European Defense Agency (2009), Defence Data 2008.

<sup>1</sup> 1980년대 EU 국방 예산 규모는 GDP 대비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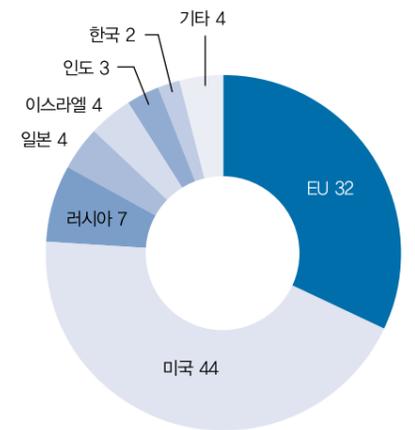
<sup>2</sup> Bekkers, F., et al. (2009). Development of a European Defence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Base(TNO Report). European Communities.

<sup>3</sup>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세계 무기 수출 규모는 2,106억 달러(1990년 고점)로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이 각각 30.8%, 25.9%, 8.8%, 7.8%, 4.8%를 차지. SIPRI (2010), Trend Indicator Values of arms exports from the top 200 largest exporters 2000-2009.

진다. 세계 100대 군수업체 중 러시아 기업은 7개가 포함되어 있다. 2008년에는 러시아의 최대 군수업체인 알마즈 안테이의 무기판매가 전년 대비 56% 증가하며 러시아 기업으로는 최초로 상위 20위에 진입하였다. 2009년 세계 100대에 포함된 러시아 군수업체들의 총 매출은 전년 대비 32%나 증가했다.

일본의 경우 세계 100대 군수업체 중 4곳이 일본기업임에도 불구하고 1976년부터 지켜온 무기 해외수출 금지 원칙 때문에 세계 무기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방위성을 중심으로 무기 대량 생산과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칙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sup>8</sup> 따라서 일본의 이 같은 변화에 대비해 EU 군수업체들은 무기개발과 생산 및 판매과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2008년 국가별 100대 군수업체 수 (단위: 개)



주: 기타에는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싱가포르의 군수업체가 1곳씩 포함.  
자료: SIPRI (2010, 4.), The SIPRI Top 100 arms-producing companies 2008.

정부총지출의 5.7%를 차지한 국방비<sup>6</sup>와 무기수입도 중장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2010년 그리스의 재정긴축안에 따르면, 국가 총예산을 전년 대비 5.5% 감축하고 이 중 국방비는 12.7%나 줄일 예정이다. 독일은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까지 800억 유로의 정부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밝혔고 군개혁을 통해 현재 25만 명의 군 병력을 최대 4만 명 줄이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sup>7</sup>

국제정치적 요소 또한 군수산업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4월 8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메드베데브 러시아 대통령은 「新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에 서명하고 핵탄두와 지상 및 해상 배치 미사일 등의 감축을 약속했다. 협정의 성공 여부는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러-미 관계가 개선되며 러-EU 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주변국들에 대한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노르웨이와 40여 년간 끌어온 해상경계선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폴란드와의 관계도 크게 호전되었다. 4월에는 푸틴 러시아 총리가 폴란드 총리의 초대를 수락해 카틴 숲에서 1940년 소련군의 폴란드군 학살 사건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하여 무릎을 꿇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또한 5월 10일에는 러시아가 나토군을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 퍼레이드에 처음으로 초대하여 붉은 광장에서 같이 행진을 했는데, 이는 러시아가 나토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노력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우호관계가 지속될 경우 군수장비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신흥국 군수업체들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어 세계 방위산업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계 2위 무기수출국인 러시아의 약진이 두드러

<sup>6</sup> 2008년 EU 평균 비중은 3.5%.  
<sup>7</sup> German cabinet backs Merkel fiscal austerity plan, (2010, 6. 7.), BBC News. <http://news.bbc.co.uk/2/hi/business/10257902.stm>

여주는 좋은 예로 방위산업과 같은 민감한 부문에서도 무역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필요한 지뢰방호 특수 장갑차량인 엠랩(MRAP)을 미국정부가 대거 구입하며 BAE 시스템스에서 지상전 병기를 담당하는 부서의 매출은 70억에서 120억으로 급증했다. 이는 선진국의 군수업체들이 이제 자국 정부와의 안정적인 관계에만 의존할 수 없고 국제적으로 기술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2009년 세계 무기 수출이 2000년 대비 25% 증가한 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군수시장은 자국 내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EU 회원국들의 무기 수입은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세계 무기 수입의 17%를 차지했는데, 이 중 60%가 EU 역내수입이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9%에 그쳤다. 특히 그리스는 국방비가 2008년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인 GDP 대비 2.6%를 기록하면서 EU 주요국들의 중요한 무기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독일과 프랑스의 무기 수출에서 각각 13%와 12%가 그리스로 수출되었다.<sup>5</sup>

### EU 방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소

경제위기 이후 전례 없는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펼친 국가들은 향후 재정건전화 작업을 통해 국방비를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군수업체들이 무기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판단된다. EU 회원국들의 주요 무기수입국인 그리스는 2009년 GDP 대비 12.7% 규모의 재정적자와 GDP 대비 113.4%의 정부부채를 기록하며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있다. 현재 계획대로 2014년까지 재정적자를 2.9%로 축소시킨다고 하더라도 국가부채는 149%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스는 긴축정책과 함께 2008년

<sup>5</sup> EU 회원국들 중 유일하게 2005~2009년 상위 5대 무기 수입국에 포함된 그리스는 세계 무기 수입의 4%를 차지하며 5위를 기록했고, 특히 독일과 프랑스로부터의 무기 수입이 총수입의 각각 35%와 23%를 차지. SIPRI (2010).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09.

5개(80억 유로) 포함되었다. 유럽 최대 항공우주 방산기업인 EADS (European Aeronautic Defense & Space Company)는 총매출 중 무기판매 비중이 28%임에도 불구하고 7위에 랭크되었다.<sup>4</sup>

★ 2008년 상위 10대 군수업체 (단위: 억 유로, %, 만 명)

순위	업체명	국가	무기 판매액	비중	고용자 수
1	BAE 시스템스	영국	324	95	10.6
2	록히드마틴	미국	299	70	14.6
3	보잉	미국	292	48	16.2
4	노스롭 그루먼	미국	261	77	12.4
5	제너럴 다이내믹스	미국	228	78	9.2
6	레이티온	미국	210	91	7.3
7	EADS	서유럽	179	28	11.8
8	핀메카니카	이탈리아	132	53	7.3
9	L-3 커뮤니케이션스	미국	122	82	6.5
10	탈레스	프랑스	108	58	6.3

주: 1) 중국 군수업체들은 데이터 부족으로 제외  
2) 비중은 무기판매가 기업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3) 고용자 수는 기업 전체  
4) Sogade(프랑스)와 Daimler(독일)가 각각 22.46%씩 EADS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SEP(스페인)이 5.48%를 보유(2010년 3월 31일 기준).  
자료: SIPRI (2010, 4.), The SIPRI Top 100 arms-producing companies 2008.

### 두각을 드러내는 EU 군수업체들의 경쟁력

EU는 미국에 대적할 만한 군수업체들을 보유하고 있다. 2008년에는 SIPRI가 군수업체 데이터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최초로 미국이 아닌 국가의 업체가 최대 군수업체가 되었다. 영국 BAE 시스템스의 매출은 상위권의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무기판매 비중이 매우 높다. BAE 시스템스의 매출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미국에 판매되었으며, 이는 방위산업의 국제화를 보

<sup>4</sup> EADS는 경기에 민감한 민수 중심의 사업구조를 바꾸기 위해 현재 민수 분야(에어버스의 민항기 사업 중심)와 비민수 분야(군사·우주·보안 등)의 비중이 7:3인 것을 2020년까지 5:5로 맞춰나가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추진 중. "에어버스 'EADS' 두 유럽病 앓았다." (2010. 6. 5.), 『조선일보』, C1.

니지만 정보통신기술(90.5억 유로), 나노/신소재(34.8억 유로), 교통(41.6억 유로), 우주산업(14.3억 유로)과 같은 관련 분야에서의 투자와 기술개발이 방위산업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sup>14</sup> EU 군수업체들과 다른 산업의 기업들, 그리고 민-관이 연구개발에 협력함으로써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를 통합하는 것이 목적이다. 안보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역내수출 승인을 받은 군수업체들은 역내에서 운송 중 통과하는 국가들과 수입국의 추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제4조 1항). 또한 이 지침은 군수품과 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규정에 해당되는 품목을 통일하고 있다.

### 투자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EU 방위산업의 R&D 투자는 2006년 이후 12.4% 하락하여 2008년에 86억 유로를 기록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총 R&D의 84%를 차지한 점에서 EU의 연구개발이 소수의 특정회원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R&D 투자 중 연구기술(R&T) 투자는 25억에 불과했는데, 이는 국방예산 대비 1.2%로 2007년 벤치마크인 2%에 크게 못 미친다. 그리고 유럽방위청(EDA)의 통합 R&D 투자자금은 5,500만 유로<sup>13</sup>에 불과하다. 방위산업의 R&D는 타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기술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방위산업의 투자 규모를 늘리고 효율성을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EU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유럽방위청은 EU R&T 투자의 공동 투자 비중 벤치마크를 20%로 설정하고 있다. 2006년에는 매우 낮은 수준인 9.6%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13.1%와 16.5%로 증가하며 곧 벤치마크 달성이 가능해 보인다.

EU 차원의 국가 간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인 <제7차(2007~2013년)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은 투자효율성 증진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제7차 FP의 총예산은 532.7억 유로이고, 협력 투자 프로그램에는 324.1억 유로가 집행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안보기술 연구개발에는 14.0억 유로가 배정되어 있다. 여기서 안보기술은 방위산업에서만 아닌 여러 고기술 산업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뜻한다. 안보기술에 배정된 자금이 큰 규모는 아

<sup>14</sup> European Commission CORDIS, Budget breakdown of the Seventh Framework Programme of the European Community (EC) (2007-2013) and Euratom (2007-2011). 2006년 12월 예산 기준. <[http://cordis.europa.eu/fp7/budget\\_en.html](http://cordis.europa.eu/fp7/budget_en.html)>

<sup>13</sup> 유럽방위청의 EDA Defence R&T Joint Investment Programme on Force Protection (JIP-FP) 예산.

는 반면, EU 군수업체들은 미국 조달시장의 0.3%를 차지한다. 또한 미국정부는 EU 군수업체들에게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국 경기부양책의 바이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은 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흥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며 국방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EU 군수업체들은 신흥시장을 겨냥해 미국과 경쟁할 만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 군수품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2009년 채택된 「군수품 조달에 대한 지침(Directive 2009/81/EC)」은 정부조달보호주의를 지양하는 EU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sup>11</sup> 먼저 지침 제25조를 살펴보면 정부는 군수품 입찰 시 '제한경쟁' 또는 '입찰공고 후 협상경쟁'의 두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EU 회원국들은 제28조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상황에서만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과정에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제27조에 따르면 복잡한 계약일 경우 '경쟁적 대화 방식'을 통한 입찰이 가능한데 이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입찰공고를 해야 하지만 '최저가격'이 아닌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을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경쟁에서 정부는 반드시 입찰에서 사용된 품질, 가격, 기술적 장점, 사후서비스(A/S) 등의 기준과 각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를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입찰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될 경우 입찰자들은 EU집행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검토기구의 조사 후 해당국가가 지침을 어겼다고 판단되면 EU집행위원회는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입찰 계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제61조).

한편 「군수품 수출입 규정을 단순화하기 위한 지침(Directive 2009/43/EC)」<sup>12</sup>은 역내수입과 역외수입을 구분하여 EU 회원국들의 군수품 수출에 대한 승인절차

<sup>11</sup> 회원국들은 2011년 8월까지 현행법을 대체해야 함.

<sup>12</sup> 2011년 6월까지 현행법을 대체하고 2012년부터 적용될 예정.

### EU 방위산업의 문제점

냉전 이후 군비 축소, EU 회원국들의 긴축정책, 동유럽 안보 안정, 신흥국 군수업체 성장 등의 외부 요소로 인해 EU 군수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인다. 방위산업의 기술은 고부가가치, 고기술 중심으로 발전하는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경제에 상당한 외부효과와 기술 파급효과를 보이며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방위산업은 전자공학, 정보통신, 수송, 바이오, 나노기술 산업과 연계되어 있다. 하지만 EU가 방위산업에 투자하는 비중은 국방비 예산의 20.9%에 머물러 있어 미국의 35.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EU 방위산업의 R&D 투자 규모도 미국의 6분의 1 수준이다. EU의 R&D 정책은 각국 별로 분산되어 있고, 투자자금은 규모와 효율성 면에서 미국에 비해 뒤떨어진다. R&D 관련 기준이 회원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공동투자 및 생산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한 협력도 쉽지 않다.

EU 역내 무기수출입에 대한 문제점도 존재한다. EU 회원국들은 자국의 방위산업을 보호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기의 안정적 공급선을 확보하려고 한다.<sup>9</sup> EU는 미국의 3배 이상인 89개의 개별 무기조달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무기조달예산 중 평균 85%를 자국에서 지출한다. EU 차원의 무기수출입 정책 통합도 미숙하다. 현재 EU 회원국들은 역내와 역외 무기수출국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이 같은 구조적 문제에 따르는 추가 비용이 매년 4억 유로가 넘는다.<sup>10</sup>

EU 군수업체들은 자국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역내수출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역외시장 공략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EU 군수품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 군수업체들은 EU 조달시장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

<sup>9</sup> EU 회원국들은 리스본조약 제346조(ex Article 296) 1항에 의해 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2항에는 군사적으로만 사용되는 무기와 군수품 생산과 같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EU 역내시장 정책과 경쟁법의 제재로부터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sup>10</sup>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7). A strategy for a stronger and more competitive European Defence industry.

# 그리스 재정위기를 통해 본 EU 경제금융 위원회의 역할

## The role of Economic and Financial Committee(EFC) in reforming EU's financial market

There are fears that the Greek debt crisis may spread to other vulnerable countries in the euro-zone. As investors lose confidence in the euro, it may experience a further depreciation and the worst case scenario is a break-up of the euro-zone. During this chaotic time, EU's Economic and Financial Committee has an important role of reforming EU's financial supervisory and regulatory frameworks. It is going to be interesting to see what kind of measures the EU Commission and the EFC will develop in order to solve the deficiencies in the European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framework, which have been revealed during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 그리스발 유럽 재정위기의 대두

최근 야기된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여러 면에서 EU, 특히 단일통화인 유로화와 이를 사용하는 유로존 국가들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그리스의 재정문제는 2009년 연말부터 EU 재무장관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여, 급기야 2010년 2월 11일 EU 정상회의에서 그리스를 지원하기로 정치적으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연이어 발표된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안에 대해 5만여 명의 시민과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서는 등 혼란은 가중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로존과 IMF는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방식인 '유로존+IMF 병행 지원 방식'에 따라 지난 5월 2일 그리스에게 3년간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그리스의 재정 위기는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이번에는 스페인의 국가부도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남유럽 재정위기는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유럽 통합체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진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EU 회원국은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이다. 그러나 1,500억 유로 규모의 막대한 유로존의 재정안정자금을 지원하려는 메르켈 총리에 대해 독일 시민들은 조세부담과 국내 경제의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로 인해 메르켈 총리의

지지율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주된 이유는 아래의 두 가지이다.

우선 하나는 2009년 10월, 독일 연방정부가 신설한 재정적자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경제위기가 아닌 평상시에 GDP의 0.3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2016년부터 연방정부가 GDP 0.35% 초과한 재정을 적자 운영하게 되면 위헌이다.<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연방정부는 그리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헌법 규정을 위반할 위험에 처해 있다.

다른 하나는 2009년 초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것이다. 금융위기 속에서 독일정부는 부실화된 금융기관과 늘어나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해 독일의 재정적자는 이미 GDP의 3%를 넘어섰고, 그 폭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와중에 그리스의 위기가 발생하여 독일정부는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독일 연방정부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메르켈 총리의 고민도 깊어만 가고 있다.

<sup>1</sup> 그러나 독일기본법(연방헌법)의 이 신설조항은 "독일의 일반적인 경제정책"으로서 "다른 유로존 국가들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병익 (2009). "독일정부, 재정적자 기록하면 헌법위반!" 『유로저널』. <[http://www.eknews.net/bbs/zboard.php?id=column\\_extra1&page=7&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it&desc=desc&no=99](http://www.eknews.net/bbs/zboard.php?id=column_extra1&page=7&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it&desc=desc&no=99)>

독일을 비롯한 일부 선도 회원국들뿐 아니라 EU 차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포르투갈·스페인 등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유로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 유로체제의 붕괴 내지는 재편론까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16개국 공 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일통화인 유로화체제가 출범 후 최대의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EU의 경제·금융 문제를 다루는 실무기구인 경제 금융위원회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경제금융위원회가 유럽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리스본조약의 발효와 경제금융위원회의 역할

2009년 12월 1일 리스본조약<sup>2</sup>이 발효됨으로써 EU의 지배구조는 물론 제도와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TFEU는 제3편 '경제통화정책(TITLE VIII ECONOMIC AND MONETARY POLICY)'이라는 제목 아래 다섯 개의 장(Chapter)을 두고 있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와 같다.

#### ★ TFEU의 경제통화정책과 관련된 규정

제3편 경제통화정책	제119조
제1장 경제정책(Chapter 1 Economic Policy)	제120조~제126조
제2장 통화정책(Chapter 2 Monetary Policy)	제127조~제133조
제3장 기관규정(Chapter 3 Institutional Provisions)	제134조~제135조
제4장 유로를 통화로 하는 회원국을 위한 특별규정 (Chapter 4 Provisions Specific to Members States Whose Currency is The Euro)	제136조~제137조
제5장 과도규정(Chapter 5 Transitional Provisions)	제139조~제144조

<sup>2</sup> 리스본조약은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TEU)과 유럽연합 운영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3월 30일자로 그 통합본(Consolidated versions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C83 of 30.3.2010, p.13) & Consolidated versions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C83 of 30.3.2010, p.47))을 공표했다.

경제통화정책과 관련된 위 규정 가운데 주목해야 할 기구가 있는데, 바로 '경제금융위원회(Economic and Financial Committee: EFC)'이다. EFC는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 설치된 '통화위원회'(Monetary Committee)를 대체하여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 제3단계가 시작된 1999년 1월 1일자로 도입되었다.<sup>3</sup>

기존의 EC조약은 EFC의 구성과 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고 이사회 결정으로 정하고 있었다. 즉, 이사회는 EFC의 구성에 대해서는 1998년 12월 21일자 결정 98/743/EC<sup>4</sup>을, 그리고 그 규정에 대해서는 1998년 12월 31일자 결정 1999/8/EC<sup>5</sup>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리스본조약은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여 EFC의 구성에 대해 TFEU에 명문의 조항을 두고 있다.

TFEU는 "회원국의 정책 조정을 최대한 촉진함으로써 역내시장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EFC를 설치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제134조 제1항). TFEU 제134조 제2항에 의하면 EFC는 회원국, 위원회 및 유럽중앙은행(ECB)이 임명하는 각 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규정상 각 주체는 '2명 이내(each appoint no more than two members of the EFC)'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관행상 각 회원국은 국내 행정당국과 국내 중앙은행에서 근무하는 고위관료를 각 1명씩 임명하고 있다. 그리고 EFC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수의 전문 실무자그룹과 하부위원회, 즉 SCIMF(Sub-Committee on IMF-

<sup>3</sup> 이전의 EC조약 제114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단계가 시작과 함께 경제금융위원회가 설립된다."

<sup>4</sup> Council Decision 98/743/EC of 21 December 1998 on the detailed provisions concerning the composition of the Economic and Financial Committee. (1998. 12. 31.). Official Journal, L 358, 109-110.

<sup>5</sup> Council Decision 1999/8/EC of 31 December 1998 adopting the Statutes of the Economic and Financial Committee. (1999. 1. 9.). Official Journal, L 5, p. 71.; Council Decision 2003/476/EC of 18 June 2003 on a revision of the Statutes of the Economic and Financial Committee. (2003. 6. 27.) Official Journal, L 158, 58-60.



Related Questions),<sup>6</sup> Eurogroup Working Group,<sup>7</sup> Sub-Committee on Euro Coins<sup>8</sup> 및 Working Group on European Sovereign Debt<sup>9</sup> 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EFC는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는가? 이에 대해 TFEU는 제134조에서 아래와 같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EFC의 가장 주된 임무는 경제·금융(금융) 관련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이사회와 유럽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EFC 스스로 발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사회나 유럽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현안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당해 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주요 임무는 회원국 및 EU의 경제·금융 상황, 특히 제3국 및 국제조직에 대한 재정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유럽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이때 EFC는 회원국들이 수립한 재정안정계획에 대해 검토 및 평가하고, 유럽위원회가 관련 회원국에 대한 다년간 감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회원국들이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부합되게 경제·재정 계획을 수립했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셋째, EFC는 경제·금융과 관련된 이사회, 특히 EU 경제재무장관이사회(ECOFIN)의 업무 준비에 협력하고,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기타 자문업무 및 준비 작업을 수행한다.

넷째, EFC는 매년 1회 이상 TEU·TFEU 및 이사회가 채택한 조칙의 적용에 따른 자본이동 및 지급 자유 상황을 검토한다. 이 검토 작업에서는 자본이동 및 지급과 관련된 모든 조치가 다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유럽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이상 제

134조 제2항).

다섯째, EFC는 “이사회가 유로화 도입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결의를 하지 않는 회원국”을 지칭하는 이른바 ‘적용 예외 회원국(Member States with a derogation)’이 있는 경우,<sup>10</sup> 해당 회원국의 통화 금융 상황 및 일반결제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정기적으로 이사회 및 유럽위원회에 보고한다(제134조 제4항).

이 외에도 EFC는 IMF와 G8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를 준비하고, 유로 대비 외국통화의 교환비율을 결정하는 ‘유럽교환율제도(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와 관련된 결정 채택 시 사전에 교환율에 관한 문제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그리스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 경제금융위원회의 역할

최근 EU는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회원국별 감독기구를 EU 차원의 단일체제로 통합하는 역내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편안은 유럽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고위급그룹(high-level group) 의장인 자크 드 라로지에르(Jacques de Larosiere)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이 개편안의 주된 내용은 유럽 역내 감독기관을 미시건전성 감독기관인 ‘유럽금융감독시스템(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s: ESFS)’ 과 거시건전성 감독기관인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an Systemic Risk Board: ESRB)’ 로 구분하여 금융위험에 대응

할 수 있는 EU 차원의 공동대응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개편안은 지난 5월 4일 유럽의회 경제금융문제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and Monetary Affairs)에 의해 채택되었고, 6월 15일 정기회기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 예정이다.<sup>11</sup>

유럽 역내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세계 금융위기 상황 속에서 행해졌다. 리스본조약에서 EFC에 관한 규정이 재정비된 것은 경제통화동맹 체제에 있어 각 회원국의 경제·금융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역내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그리스발 재정위기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남부유럽 회원국뿐 아니라 유로존 체제의 붕괴 위기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EFC의 일부 위원들은 단일통화인 유로의 신용도 하락에 대해 “전쟁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2</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FC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회원국의 경제·금융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 및 유럽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제3003차 이사회는 회원국들, 특히 그리스를 포함한 일부 남부유럽 회원국들에 대한 재정위기의 부정적 파급효과(negative spill-over effect)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의 진전 상황에 대해 검토한 후 6월에 개최될 이사회에서 이에 관한 정기보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sup>13</sup> 정기보고제도는 이사회와 유럽위원회가 유럽 역내의 경제·금융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EFC가 이번 달에 제출할 보고서는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그리스발 재정위기에 있어 벗어날 수 있는 구체

적 대안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아울러 지난 5월 12일자 ‘EU에서의 경제적 지배체제(the economic governance) 강화’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제안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유럽위원회가 이 제안을 한 목적은 「안정성장협약」의 기능을 강화하고, 거시경제의 불균형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는 것이다.<sup>14</sup> EFC와 유럽위원회의 보고서에 실린 정책제안은 현재 EU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금융 지배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과연 이사회와 유럽위원회가 유럽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구체적인 카드를 제시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

채형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sup>6</sup> IMF에 관하여 EU의 입장을 준비하고 논의한다.

<sup>7</sup> 경제장관들을 제외한 유로 가입국 장관들이 모여 유로화 관련 논의를 하는 모임인 유로그룹의 회의를 준비한다.

<sup>8</sup> 유로화 가운데 주화의 위조·변조 및 상업화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sup>9</sup> 회원국들의 보험시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sup>10</sup> 유로를 통화로 하는 회원국(Member States whose currency is the euro)에 대해 적용되는 아래 사항은 ‘적용 예외 회원국’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39조 제2항).

(a) 경제정책 지침 속의 유로 통화권과 일반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의 채택(제121조 제2항); (b) 과도한 적자 삭감을 위한 강제수단(제126조 제9항 및 제11항); (c) 유럽중앙은행의 목표 및 임무(제127조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5항); (d) 유로의 발행(제128조); (e) 유럽중앙은행의 행위(제132조); (f) 유로 사용에 관한 조치(제133조); (g) 외환정책에 관한 통화협정 및 기타 조치(제129조); (h) 유럽중앙은행 집행위원회 위원 임명(제283조 제2항); (i) 관할 국제금융기구 및 국제금융회의의 경제통화동맹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에 대해 취해야 할 공동 입장을 정하기 위한 결정(제138조 제1항); (j) 국제금융기구 및 국제금융회의의 시 단일 대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제138조 제2항)

<sup>11</sup> 박영준·김연실 (2010). “EU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10(8), 1-8.

<sup>12</sup> nrc handelsblad (2010. 4. 12.). EU bails out

<sup>13</sup> Greece after final push from markets. <http://www.nrc.nl/international/europe/article2523022.ece/EU\_bails\_out\_Greece\_after\_final\_push\_from\_markets> (2010. 6. 3.)

<sup>14</sup> European Commission (2010. 5. 20.). The EC proposals to reinforce economic governance in Europe.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MEMO/10/204&format=HT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footnote-1>



# 남유럽 재정위기와 유럽식 복지국가의 영향과 교훈

## Lessons of the European social welfare system and effects of financial crisis

The future of a welfare state ultimately depends on its economic growth, productivity, and macroeconomic stability. As the economic situation worsens, the welfare demand increases, which in turn raises the level of governments' welfare expenditure. The European social welfare system is now regarded as being too expensive and unsustainable and it is even eating up the resources which are needed for productive activities in the economy. Southern European countries are suffering from this situation. Their governments are now faced with difficult challenges of achieving a long term economic growth and creating new jobs while maintaining an appropriate level of social safety net.

### 유럽식 복지국가와 재정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사태가 유로화와 EU는 물론, 세계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이번 재정 위기가 EU와 유럽 국가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준 만큼 그리스는 물론 유럽 국가들에게 많은 변화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유럽식 복지국가에 어떤 영향과 교훈을 줄 것인가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공공부문이 크고 복지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GDP 대비 재정 비중이 높고 이에 따라 재정적자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리스를 비롯하여 재정위기에 처한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감축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 재정적자 문제는 남유럽 국가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GDP 대비 재정적자 3% 이내, 국가부채 60% 이내라는 EU의 협약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이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성격은 다르지만 일본과 미국의 재정적자 또한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2008년 9월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로 경기침체 우려가 심화되자 유럽 각국은 2008, 2009년도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감세정책을 추진하였다. 기존의 공공정책에 더해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다양한 사회정책적 재정지출을 확대하였다. 고용촉진 및 실업자 지원, 저소득층 지원 강화, 기업 지원, 인프라 투자 확대, 부가가치세 인하

등이 그것이다.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일차적으로 유로화 가입 프리미엄에 의존한 과도한 재정지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력이 약한 경제, 고령화 심화, 고실업 등이 복지지출 증대와 구조적 재정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문제가 있는 국가들은 다른 변수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그리스가 그 첫 사례가 되었고, 그리스에 대한 대응이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EU, 특히 독일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중한 접근이 오히려 유로화와 EU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전개되었다. 다행히 EU와 IMF가 그리스 지원금 및 재정안정기금으로 총 8,600억 유로의 지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재정위기 국가들은 정부지출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공공부문 임금억제 또는 삭감, 연금개혁, 실업급여 및 복지수당 합리화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복지서비스 지출 외에도 다른 지역의 국가들에 비해 공공부문 근로자가 많고 인구가 고령화되어 있어 재정에서 이들의 임금 및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또한 유럽 국가들은 실업률도 높아 실업급여 지출도 많은 편이다. 재정 감축이 남유럽 국가들뿐 아니라 유

럽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최근 그리스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영국도 법정정년 연령을 2~3세 상향하거나 일시적인 연금 동결 등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당연히 이에 따른 사회적 저항이 큰데, 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의 경우 근로자들은 정부 부패와 부유층 탈세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하며 임금억제와 연금개혁에 반대해 파업을 벌이고 있다. 오랜 기간 보호받아온 근로자에게 복지 축소, 고용 유연화, 정부보조금 폐지 또는 삭감 등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복지국가

높은 수준의 복지지출은 유럽식 복지국가의 특징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유럽 국가들은 미국을 비롯하여 다른 어느 국가나 지역보다 보편성과 포괄성, 관대성의 측면에서 발달된 복지체제를 가지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이루어진 수준 높은 복지제도의 '유러피언 드림'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또는 지속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1970년대의 경제위기 및 복지국가 위기로 이후 계속 되어왔다. 그럼에도 유럽식 복지국가는 나라마다 그 범위와 정도는 다르지만, 1980년대부터 제도개혁과 유권자들의 지지 속에 큰 후퇴 없이 이어져 왔다. 1980년대에 많은 유럽 국가들은 높은 실업률을 겪었는데, 이러한 경험으로 노동시장이 개혁되었고 고용정책이 발전했다. 소위 말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 그것이다. 노동시장 유연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보편적 실업급여를 특징으로 하는 유연안정성 모델은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보호 모두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1980년대에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한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유연안정성 모델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많은 유럽 국가들도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여 노동개혁과 고용 증시 복지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남부유럽이 유독 심각하게 재정위기와 경제위기를 겪는 이유는 그들의 경제체제와 복지체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유럽 모델은 고성장에 긍정적으로만 반응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유럽식 복지국가와 경직된 경제·사회 시스템에 기인한 고비용-저효율 체제, 즉 '유럽동맥경화증(Euroclerosis)'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유럽 국가들이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고성장에 친화적이라는 영미 모델에 속하는 영국과 아일랜드 또한 재정적자가 매우 심각하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강한 경쟁력에 기반한 고비용-고효율 체제로 성장과 분배 모두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왔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y of capitalism)' 이론에 따르면 생산체제와 복지체제는 나라마다 다르게 발전되어왔으며, 어떤 나라들에서는 효율성과 상호보완성이 높은 생산체제와 복지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sup>1</sup> 따라서 유럽 국가들의 상이한 생산체제와 복지체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복지지출 규모가 크고 비율이 높다고 해서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경제가 취약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복지지출과 경쟁력의 관계는 조건에 따른 유연적 관계이다.<sup>2</sup>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은 복지지출이 매우 높지만 재정, 고용, 성장에서 남유럽 국가들은 물론 프랑스, 영국에 비해서도 양호하다. 북유럽형 자본주의 모델에 속하는 이들 국가는 도이치 방크가 사회적 신뢰, 부패, 실업, 교육 및 소득 수준 등을 반영하여 분석한 자본주의 다양성 분류<sup>3</sup>에서 모두 Happy Variety군에 포함되어 있다. Less Happy Variety군에는 프랑스, 벨지움,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남유럽 국가들은

<sup>1</sup> Peter Hall and David Soskice (eds.),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sup>2</sup> 북유럽 국가와 남유럽 국가의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2005년 기준, Eurostat)을 보면, 32.0%(스웨덴), 26.7%(핀란드), 30.1%(덴마크), 24.2%(그리스), 20.8%(스페인), 26.4%(이탈리아)임

<sup>3</sup> Deutsche Bank Research (2007). The Happy Variety of Capitalism.

Unhappy Variety에 속해 있다. 이는 남유럽 국가들의 문제가 단순히 재정지출이 많아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북유럽 국가들에서 보듯이 복지지출이 많아도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고 부패와 탈세가 적으며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가 경쟁력 있는 경제체제와 복지체제를 만들 수 있다.<sup>4</sup> 인적자본의 기초를 개선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고속련-고부가가치-고임금 전략'을 채택한 유럽 강소국들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상위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개혁과 혁신을 통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들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물론 이번 재정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고 인플레이션 및 재정을 성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높은 복지 수준과 사회통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처럼 고유의 복지모델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사회적 합의와 조정을 통해 추진된 세계개혁, 연금개혁, 복지개혁,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고령화에 대비할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노사정 합의를 통해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의 임금억제를 지켜왔다.

#### '리스본전략'과 '유럽화'를 위한 개혁

EU는 이러한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공개협력방식(Open Method of Coordination: OMC)을 도입하였다. OMC는 EU 회원국 간 사회정책을 조정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법이다. 사회정책, 특히 복지정책은 국가 간, 계층 간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회원국 고유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 관행이 두드러진 영역이기 때문에 변화와 개혁이 어렵다. 또한 개별 회원국의 사회정책은 정치사회적 동학과 맥락에서 제도화되어왔다. 따라서 EU 차원에서 사회정책을 규

제하기란 매우 어렵고 설령 단일규정과 정책이 만들어진다 해도 실행 과정에서 국내의 정치적 저항과 사회적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공개협력방식은 이러한 배경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정책학습과 정보, 지식을 공유하고, 국내 실정과 역량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실행을 하려는 것이다. 또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그리스는 이러한 '유럽화(Europeanization)' 과정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EU가 요구한 외부의 개혁압력을 가로막는 국내 저항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EU는 1990년대 들어 통합의 목표인 유럽화를 가속화시키면서 '리스본전략'을 통해 회원국의 제도개혁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제도의 비교 우위성이 약한 그리스는 유럽화에 맞는 개혁을 하지 못했다. 노조는 물론 기업도 규제, 보호, 보조금에 길들여져 있어 변화에 저항해왔다. 개혁과 개방을 반대하고 기득권과 국가로부터의 보호를 지속해서 받고자 한 것이다. 또한 그리스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어 공공부문의 고용보호 수준이 높고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하며 연금시스템은 왜곡되어 있다. 특히 국가 기구의 허약성과 비효율, 개혁을 반대하는 비토세력을 극복할 역량 부족, 사회적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정치주체들이 문제이다.

반면, 노동시장과 복지의 경직성이 높은 독일과 프랑스는 EU의 규제를 활용하여 시장자유화와 민영화 개혁에 대한 국내의 반대를 극복하는 데 성공하였다. EU가 개혁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북유럽 국가들이 조정과 타협으로 큰 갈등 없이 유럽화를 이룬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갈등을 겪으며 유럽화 개혁을 추진한 것이다. 남유럽 국가들, 즉 지중해형 자본주의 국가들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개혁이 지지부진했다.<sup>5</sup> 이번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유럽식 복지국가는 2차 구조개혁이 불가피해졌

다. 다만 2차 구조개혁은 1차 때 구조개혁이 미흡했던 나라들이 주 대상이 될 것이다. 2차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유럽식 복지국가는 크게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개혁을 통해 복지제도가 쇠신될 것이다.

#### 복지국가의 개혁과 쇠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 많은 나라에서 중도우파가 집권하고 있다. 긴축이 불가피한 현재의 상황에서 분배나 지출보다 성장과 투자를 우선하는 우파정부의 특성으로 인해 당분간 복지국가의 후퇴는 확실해 보인다. 유럽 국가들의 재정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금과 연금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다. 한 국가의 국민총소득을, 좁게는 한 국가의 재정을 어디에, 얼마나 할당, 즉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치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개혁을 통해 재정지출을 합리화하고 근로인센티브를 높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높은 수준의 생산성과 고용은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막강한 세금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위기로 복지지출이 축소되면서 유럽식 복지국가는 또다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식 복지국가는 1970년대 이후 계속 위기였고 또 위기를 겪으면서 쇠신하고 변화해왔다. 이제 전성기를 구가했던 1960년대식 복지국가는 그 어디에도 없다. 저출산, 고령화, 고실업이라는 변화된 환경은 변화된 복지국가의 역할을 요구해왔다. 또한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공공인센티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노동인구 증대, 인적자본 제고 등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되어왔다.

경쟁력 있는 복지국가는 공교육, 공공보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영유아보호정책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단순한 소득이전보다 비경제활동인구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에서 보듯이 높은 세금과 지출이라도 투자적 성격의 재정

지출에 중점을 둬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이 교육, 건강, 일, 안전, 사회적 신뢰, 정치적 자원 등을 더 많이 갖고 누리게 만드는 것이 좋은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다. 이는 바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복지재정이 성장을 저해한다거나 반대로 성장을 촉진한다는 단순 논리는 맞지 않다. 생산성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투자뿐 아니라 기본적인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출되어야 할 복지재정 또한 여전히 중요하다.

당연히 복지국가의 앞날은 경제성장, 효율성, 거시경제적 안정을 얼마나 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경제상황이 나빠질수록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그만큼 더 많은 자원이 복지에 지출된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갈수록 복지는 물론 생산을 위한 자원도 고갈되어 경제적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바로 현재 남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 능력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복지국가는 사회적 안전과 효율을 제고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김인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sup>4</sup> 잘 알려져 있듯이, 북유럽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 효율성 수준이 가장 높고, 부패와 탈세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반면,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한국보다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sup>5</sup> Menz, G. (2005). Varieties of Capitalism and Europeanization: National Response Strategies to the Single European Marke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유로 회원국 간 경쟁력 차이는 거시경제 불균형을 야기

## Competitiveness divergences between euro area members lead to intra-euro-zone macroeconomic imbalances

EU집행위원회는 <유로지역 내 경쟁력 및 불균형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EMU 회원국<sup>1</sup> 간 경쟁력의 차이가 역대 불균형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EMU 회원국의 경제와 금융 부문의 취약성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국가 간 경쟁력 차이와 높은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는 조정비용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무역과 금융 부문은 국가 간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거시경제의 불균형은 EMU의 기능과 유로화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첫째, 위기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경쟁력 차이와 거시경제 불균형에 대한 수평적 평가를 제시하고, 사용 가능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둘째, 개별 회원국의 경쟁력을 심도 있게 평가하였다.

유로지역 국가 중 경쟁력이 높은 국가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왔으나, 경쟁력이 낮은 국가는 대외부채의 가파른 상승으로 높은 경상 및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불균형이 크게 형성되었다. 대외부채 상승은 많은 EMU 회원국의 수출성장에 심각한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유로지역 내 경쟁력 차이와 경상수지 적자는 부적절한 임금 체계, 주택 버블 등 각국의 대내경제 불균형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더해 가계와 기업의 대규모 부채와 몇몇 회원국의 부적절한 재정정책은 위기를 더욱 악화시킨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위기 이후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EMU 회원국들은 민간부문 수요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였다.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 회원국들이 수출 특

화와 개방 정도가 크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수요 변화와 세계 무역의 슬럼프에 오히려 더 크게 노출되었다. 수출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EMU 회원국들이 흑자를 기록한 회원국들에 비해 감소 폭이 적었다.

현재 모든 EMU 회원국들은 경제, 예산, 금융 부문에서 위기 이후 형성된 여러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지속성장을 위한 상황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위기가 잠재산출량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산성과 성장률을 높이며, 글로벌 경제에서 유로지역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유로지역의 경쟁력 차이와 거시경제 불균형의 순조로운 조정은 경기회복의 핵심 사항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EMU는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회원국들은 유로지역 내 조정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야심찬 정책적 대응에 힘써야 한다.

모든 EMU 회원국에 광범위한 조정이 필요하지만, 조정을 위한 정책적 대응은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은 각국의 취약성을 고려해 이를 둘러싼 우려와 요구를 모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높은 공공부채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경쟁력 손실이 발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금융시장에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고 차입비율을 낮추는 등의 요구에는 각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재정정책, 신용시장, 노동시장,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을 모두 고려해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0). Surveillance of Intra-Euro-Area Competitiveness and Imbalances.) ★

이지혜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The EU Commission published a report <Surveillance of Intra-Euro-Area competitiveness and Imbalances>, which concludes that competitiveness divergences between EMU(The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countries are the major cause for macroeconomic imbalances in the monetary union. Imbalances, in turn, has increased the economic and financial vulnerability of member states. To solve the problem of divergences and large budget deficits, member states have to adopt appropriate policies and the adjustment period will inevitably be painful. There exists significant spill-over effects of these policies in trade and financial market. If the structural problem is not solved for a protracted period of time, macroeconomic imbalances will affect the functioning of the EMU and investors will start to lose confidence in the euro. This report aims to analyse how much impact policy responses of various speeds and magnitude will have on the future functioning of the EMU. Firstly, it examines the magnitude of macroeconomic imbalances and competitiveness divergences in the monetary union, focusing on the impact of the crisis, and discuss possible policy responses. Secondly, it provides an in-depth assessment of each member's economic competitiveness.

Imbalances did not appear overnight. Those countries with price/cost competitiveness saw steady gains whereas others continued to build more and more external debt, current deficit and budget deficit. These processes began before the crisis and the continued increase in certain members' external debt represented

significant structural weaknesses in their export ability. Competitiveness divergences and current account deficits widened due to certain members' inappropriate level of wages and housing bubbles, which has its roots in a rapid credit growth. These problems were magnified as a number of member countries adopted inappropriate fiscal policies and large capital inflows resulted in an unsustainable accumulation of household and corporate debt.

Private demand in large current account deficit countries has decreased more dramatically than in other euro-zone members, but exports less so. The opposite has been true for large current account surplus countries as they have been more dependent on exports and hence more exposed to the depressed world trade and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domestic demand.

Member states' reform efforts cover various areas of finance, government budget, and building competitiveness. The final aim is to restore a sustainable growth path and to minimise the impact of the crisis on output and unemployment. The key is to raise the EU's overall productivity and its competitiveness.

Internal adjustment requires a coordinated policy response, but this will be difficult as surplus and deficit countries wish to adopt different policies. In order to solve the structural problem of euro-zone, it requires policy makers to take member states' different economic situations into account. (Report: European Commission (2010). Surveillance of Intra-Euro-Area Competitiveness and Imbalances.)

<sup>1</sup> EMU(The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는 유럽경제통화 동맹의 약자로 유럽공동체(EC)의 통화통합을 위한 동맹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을 창설하고 각국 통화의 환율을 고정시켜 동일한 통화(유로)를 사용하고 있다.



### 제12~14회 EU 특별강연 The 12<sup>th</sup>, 13<sup>th</sup> and the 14<sup>th</sup> EU Special Lecture

The Yonsei-SERI EU Centre held its 12<sup>th</sup> EU Special Lecture on the 3<sup>rd</sup> of May. Dr. Yang, Oh-Suk, a research fellow at SERI, gave a lecture under the title "Sovereign debt crisis in Europe: Causes and Challenges."

On the 10<sup>th</sup> of May, the 13<sup>th</sup> EU Special Lecture was led by Professor Frank Deppe, who gave a talk on "The Crisis and Prospect of the European Union: Focusing on the Under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Policy."

In the afternoon of the 10<sup>th</sup>, Pastor Christian Wolff of St. Thomas School, Leipzig, chose "Life at the dividing line between Eastern and Western Europe after German unification" as the topic for the 14<sup>th</sup> EU Special Lecture.

연세-SERI EU 센터는 5월 3일 제12회 EU 특별강연을 개최하였다. 강사로 나선 삼성경제연구소의 양오석 수석연구원은 "유럽 국가부도 위기: 원인과 해결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 10일에는 제13회 특별강연이 개최되었는데, 프랑크 데페 교수(Frank Deppe,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가 "EU의 위기와 전망-사회복지정책 저발전을 중심으로(The Crisis and Prospect of the European Union-Focusing on the Under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Policy)"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같은 날 오후에는 라이프치히 토마스 교회의 크리스티안 볼프(Christian Wolff) 목사가 "동서유럽의 분할선에 위치한 통일독일에서의 삶"을 주제로 제14회 EU 특별강연의 발표를 맡았다.



### 오찬 미팅 "EU와 한국의 현황 분석" FKCCI: Luncheon Meeting "EU and Korea: Where do we stand?"

On the 25<sup>th</sup> of May, the Yonsei-SERI EU Centre hosted a roundtable discussion under the title "EU and Korea: Where do we stand?" at Novotel. Panel discussants included Lee Hye-Min, chief FTA negotiator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Jean-Dominique Giuliani of Foundation Robert Schuman and Professor Shin Sang-Hyub of Kyung Hee University.

지난 5월 25일 노보텔에서 "EU and Korea: Where do we stand?"라는 주제로 원탁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는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장 도미니크 줄리아니(Jean-Dominique Giuliani) 로베르 슈망 재단 이사장, 신상협 경희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석하였다.





### 제7회 EU Core Circle 세미나 The 7th EU Core Circle Seminar

On the 25th of May, the 7th EU Core Circle Seminar was held at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This seminar was sponsored by the EU Commission and was organised by the Yonsei-SERI EU Centre.

Jean-Dominique Giuliani of Foundation Robert Schuman led the seminar under the title "Is the EU ready to face crisis?: Greek debt, Ukrainian gas & strategic issues." The participants discussed on possible solutions for the current global financial crisis and future challenges regarding the mounting sovereign debt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European Union. A number of European ambassadors to Korea (Brian McDonald of the EU, Juan Lena of Spain, Pierre Clement Dubuisson of Belgium) shared their views on current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s in their countries and in the EU. Mr. Giuliani emphasised that a deeper political integration within the EU is vital if the EU were to survive the current and future crises.

지난 5월 25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후원하고 연세-SERI EU센터가 주관하는 제7회 Core Circle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Is the EU ready to face crisis?: Greek debt, Ukrainian gas & strategic issues"라는 주제로 현재 그리스발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금융불안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EU 차원에서의 대응방안과 미래 통합의 올바른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강연에는 브라이언 맥도널드(Brian McDonald) 주한 EU 대표부 대사, 후안 레나(Juan Lena) 주한 스페인 대사, 피에르 클레망 뒤뷔송(Pierre Clement Dubuisson) 주한 벨기에 대사 등이 참석해 현재 EU의 경제 및 정치 상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주장 연자 로베르 슈망 재단의 장 도미니크 줄리아니는 EU의 정치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더욱 강력히 결속된 EU가 현재의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